기본연구보고서 2013 - 20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의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romotions of Social Capital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최 길 수

대전발전연구원
DAEJEON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진

연구책임	• 최길수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목 차

제1장 서 론 ····· 3
제1절 연구의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제2장 사회적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 ····· 11
제1절 사회적자본의 의의 ····· 11
1. 사회적자본의 관심 ····· 11
2. 사회적자본의 정의 ····· 12
3. 사회적자본의 특징 ····· 14
제2절 사회적자본 연구의 기초 ····· 16
1. 사회적자본 연구의 다차원성 ····· 16
2. 사회적자본 구성요소 ····· 17
제3절 사회적자본의 연구경향 ····· 20
1. 사회적자본의 연구경향 ····· 20
2. 사회적자본의 실증연구 ····· 21
3. 지역 사회적자본의 실증연구 ····· 23

제3장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의 진단 및 시사점 ····· 27
제1절 사회적자본에 관한 인지도 분석 ····· 27
1. 조사의 개요 ····· 27
2. 전반적 사회적자본에 대한 인지여부 ····· 30
3. 사회적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한 인지도 ····· 31
4. 조사결과의 시사점 ····· 40

제2절 사회적자본의 수준 진단 ····· 42
1. 조사의 개요 ····· 42
2. 조사결과의 분석 ····· 43
3. 조사결과의 시사점 ····· 55
제3절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진단 ····· 57
1. 사업의 개요 ····· 57
2.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 조사 ····· 63

제4장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증진 방안 ····· 71
제1절 사회적자본 요소별 증진 방안 ····· 71
1. 신뢰의 증진 ····· 71
2. 지역공동체를 위한 바람직하고 선한 공동체 규범 구축 ····· 73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 74
4. 참여역량 강화 ····· 75
제2절 시민(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 77
1. 시민(공무원)교육의 필요성 ····· 77
2. 사회적자본에 관한 시민교육 강화 ····· 78
3. 사회적자본에 관한 공무원교육훈련 강화 ····· 79
제3절 사회적자본 지표체계의 구축 ····· 80
1. 지표체계 구축의 배경 ····· 80
2. 지역사회와 사회적자본 지표의 연계성 ····· 81
3.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측정지표의 개발 ····· 83
제4절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 85
1. 중간지원기관의 의의 ····· 85
2.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역할 제고 ····· 89

제5장 결 론 ····· 95

참고문헌 ····· 101

부록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 ····· 109

표 목 차

<표 2-1> 사회적자본의 정의 ····· 13
<표 2-2>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 사회적자본의 비교 ····· 15
<표 2-3> 사회적자본에 관한 다양한 실증연구 ····· 21
<표 2-4> 지역사회적자본의 실증연구 ····· 24
<표 3-1> 성별·연령·학력·직업·거주지별 기술통계 ····· 28
<표 3-2> 가구소득·주거형태·거주기간·주택소유형태별 기술통계 ····· 29
<표 3-3>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인지도 ····· 30
<표 3-4> 사회적자본 인지경로 ····· 30
<표 3-5>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중요 요인 ····· 31
<표 3-6> 전반적 신뢰증진을 위한 영역별 신뢰 중요 영역 ····· 32
<표 3-7> 개인적 차원의 신뢰 증진을 위한 중요 영역 ····· 32
<표 3-8> 공공기관 및 제도 신뢰 증진을 위한 중요 영역 ····· 33
<표 3-9> 공공기관 종사자 신뢰 증진을 위한 중요 영역 ····· 33
<표 3-10> 사회기관 신뢰 증진을 위한 중요영역 ····· 34
<표 3-11> 의사전달매체 신뢰 증진을 위한 중요영역 ····· 34
<표 3-12> 사회적 규범 향상 중요 요인 ····· 35
<표 3-13>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방법의 중요도 ····· 35
<표 3-14>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중요 요인 ····· 36
<표 3-15> 부정부패근절을 위한 중요 대상 ····· 36
<표 3-16> 준법의식 증진을 위한 중요 요인 ····· 37
<표 3-17>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중요 지역네트워크 ····· 37
<표 3-18>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각종 지역네트워크 중요도 ····· 38
<표 3-19>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중요 참여방법 ····· 39
<표 3-20>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 참여시 고려사항 ····· 39
<표 3-21> 일반국민들에 대한 신뢰 수준 ····· 43

<표 3-22> 사람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 44
<표 3-23> 사람들 간의 신뢰 수준 ····· 45
<표 3-24> 동네 주민관계에 대한 인식 ····· 46
<표 3-25> 이웃 간의 교류에 대한 질문 ····· 46
<표 3-26> 동네 사람들의 시민의식 ····· 47
<표 3-27> 동네의 공공문제 해결 역량 ····· 48
<표 3-28>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참여도 ····· 49
<표 3-29> 국가(중앙)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 51
<표 3-30> 대전의 주요 사회기관(사람)에 대한 신뢰도 ····· 52
<표 3-31> 대전시정에 대한 인식도 ····· 54
<표 3-32>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예산 내역 ····· 58
<표 3-33>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예시 ····· 59
<표 3-34>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절차 ····· 60
<표 3-35>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내용 ····· 62
<표 3-36>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결과 ····· 62
<표 3-37> 사업비의 적정성 ····· 64
<표 3-38> 홍보의 충분성 ····· 64
<표 3-39> 사업 설명회의 적절성 ····· 64
<표 3-40> 제안서 작성의 용이성 ····· 65
<표 3-41> 구비서류의 적정성 ····· 65
<표 3-42> 심사기준의 적절성 ····· 65
<표 3-43> 사업기간의 적정성 ····· 66
<표 3-44> 사업수행의 애로점 ····· 66
<표 3-45> 사업수행의 성공요건 ····· 67
<표 4-1>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과정 ····· 80

그 림 목 차

<그림 2-1> 사회적자본의 연구의 다양한 수준 및 측면 ····· 17
<그림 3-1>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틀 ····· 57
<그림 4-1>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사업추진체계 ····· 90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한국 사회는 현재 성장, 분배, 사회통합, 후생 모든 면에서 커다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소득 수준은 2만불 수준으로 높아 졌지만, 개인의 욕구가 단순한 '경제적 욕구' 이상으로 고급화·다양화되면서 삶의 질과 보람은 대체적으로 저조하다. 저성장속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적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나 이념, 정치·사회적 역할을 둘러싼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안정성장과 사회통합의 기반 모두를 위협하는 양상이다. 다양한 욕구와 가치를 수용하면서 사회의 역동성,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순수한 경제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춘 접근은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경제·사회적 문제의 기저를 형성하는 사회성원의 상호관계에 주목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른바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회적자본은 '협력과 참여' 등 사회 성원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생산적 상호작용을 창출하는 무형자산으로서 경제·사회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높이는데 긴요한 역할을 수행한다(한국개발연구원, 2007: 1). 사회적자본이 풍부한 사회일수록 교육, 보건, 치안, 경제·사회적 평등 수준이 향상되는 등 사회적 통합이 강화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적자본은 정부개입의 원리를 제공하는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를 극복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주된다. 집단행동의 딜레마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이기적 계산에 따른 행동(예: 무임승차)으로 인해 집합적 행위의 결과가 더 열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자본은 사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개인을 공동이익과 공동선을 지향하는 시민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탈바꿈시킴

으로써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공공재 또는 공유재의 문제를 시민사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사회적자본의 존재는 주민들 스스로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복지, 치안, 교육, 문화 등과 관련하여 공공선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면에서 '시민사회'(civil society)의 역량을 나타내는 대표적 개념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적자본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어떤 지역이나 국가의 사회적자본의 부재는 사회구성원 사이의 거래비용을 높이면서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면, 거래 당사자 사이에 신뢰가 없다면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해 제3자를 끌어들이거나 법적 장치를 강구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사회적자본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낭비가 되는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사회적자본이 존재할 때 시민들 사이에는 공유된 목적을 추구하는 집합적 행위 역량이 생성된다. 이 때, 시민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역량 있는 정부를 기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되며, 정치인들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자본이 축적된 사회는 시민들의 집합적 참여를 통해 '좋은 정부'를 만들어가는 선순환의 궤도에 오르게 한다(곽현근, 2012: 16-17).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 세계화라는 시대적 트랜드 속에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첫째,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생산요소로서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21세기 지식경제사회는 '네트워크 지식'의 시대로서 기업, 지역, 국가를 막론하고 개개인의 지적 역량 못지않게 이들을 결합하는 집단적 역량이 중요하다. 특히 지식경제의 핵심산업인 지식집약서비스업에서는 고급 지식자원 간의 수평적 네트워킹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바, 사회적자본은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 있어 한 경제의 혁신성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 된다. 둘째, 세계화로 인해 물적자본은 물론 인력의 국제적 이동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최후의 국가 고정자산이자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자본적으로 사회관계에 기초한 제도, 신뢰, 규범 등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단순 모방하기 어렵다. 사회적자본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성원간 상호작용, 학습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만큼 시장에서의 대체성이 맞기 때문이다. 실제, 작금의 세계경제에서 자본은 두뇌를 쫓아 이동하는 추세이다. 한마디로 희소한 생

산요소로서 사회적자본의 가치가 물적 자본은 물론 인적자원 보다도 더 높게 된 것인데, 이러한 경향은 세계화의 심화와 함께 계속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주목하여 근래에는 학술적 차원의 관심을 넘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사회적자본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07: 5-6).

높은 수준의 사회적자본을 가진 국가나 지역들은 더 효과적인 민주적 제도 또는 정부를 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하며, 더 나은 국민보건지표, 성별평등 수준을 보여주고, 좀 더 광범위한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체계를 갖추고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도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은 낮은 범죄와 부패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자본을 가진 국가나 지역은 높은 수준의 인간적 후생(human well-being)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자본은 북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의 4개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2년 7월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OECD국가의 행복지수 산출결과를 보면, 전체 34개국 중 덴마크(1위), 노르웨이(3위), 스웨덴(6위)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행복지수 순위를 보면 조사대상 34개 OECD 국가 중 32위를 차지했다. OECD국가 중 자살률과 저출산률 1위라는 통계도 우리사회 행복지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자살론'을 써서 '현대 사회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뒤르켕의 경우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의식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문제임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사회적 연대가 현대에 와서 사회적자본으로 해석되고 있다(곽현근, 2012: 17-18). 한국의 사회적자본 지수는 OECD국가 중에서도 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자본 종합지수로 볼 때, 한국의 사회적자본 수준은 OECD 회원 국 중 하위인 22위로 선진국 중 사회적자본이 취약하다고 알려진 이탈리아(21위)와 비슷한 수준이다. 신뢰, 사회규범 및 사회구조 등 한국의 사회적자본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뢰 중 일반적 신뢰, 경찰 신뢰, 금융시장 신뢰, 정부의 소유권 보호 등의 항목과 사회규범 중 법질서 준수, 부패, 시민의식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다(삼성경제연구소, 2009).

이러한 사회적자본은 분석 초점에 따라 개인, 동네, 지역, 국가 등과 같이 다양한 수준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데, 사회적자본의 대표적 학자 중 사회학자인 Bourdieu와 Coleman같은 학자는 개인 또는 가족 수준의 사회적자본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미국 하버드대학 정치학자인 R. Putnam은 지역사회와 같은 사회조직 수준의 사회적자본에 초점을 두고 있다(곽현근, 2012: 13).

대전광역시는 민선5기 후반기 시정방침으로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선언한 이후 2012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시민사회단체, 관련 학계인사, 대전시 공무원이 참여하는 사회적자본 워킹그룹이 구성하여 10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제도적 차원에서 2013년 2월 광역시 최초로 대전시의회 주도의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가 제정되어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어서 2013년 3월 대전광역시는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출범시키는 등 현재까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전지역 사회적자본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여 사회적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자본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실태분석을 통하여 지역적 차원에서의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의 증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내용적 범위는 사회적자본에 이론적 배경, 대전광역시의 사회적자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인지도분석, 수준진단, 사회적자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대전지역의 사회적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등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적자본의 증진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는 대전지역으로 설정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의 고찰과 사회적자본에 관한 실태조사의 결과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전자의 기존문헌 고찰에서는 사회적자본에 관한 다양한 문헌 즉, 구성요소, 학문적 연구방향, 분석수준 및 영역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사회적자본에 관한 개념적 준거틀을 확립하고자 한다. 또한 후자의 실태분석에서는 우선, 사회적자본에 대한 대전지역민들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대전의 사회적자본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 사회적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사회적자본의 의의
제2절 사회적자본 연구의 기초
제3절 사회적자본의 연구경향

제2장 사회적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사회적자본의 의의

1. 사회적자본의 관심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사회적자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자본이라고 하는 경제학적인 개념을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사회학적 개념과 결합함으로써 기존에 설명하지 못했거나 사회발전의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경제학에서 사회적자본에 대한 논의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접근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데서 발생했다. 즉 개인과 집단의 합리적 경제행위에 대한 시장논리의 한계를 넘고자 했다(박희봉, 2009). 정치학에서 사회적자본의 기원은 지역 또는 국가간 민주화 정도와 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사회적자본에서 찾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지역문제와 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사회적자본에 대한 관심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예를 들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교육, 보건, 범죄, 실업과 같은 지역 또는 사회문제 해결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Putnam, 1995).

이처럼 사회과학이 사회적자본(social captital)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자본이 가지고 있는 다차원성이다. 사회적자본은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사회내의 신뢰관계, 자발적 참여, 인적 네트워크, 규범 등과 같은 다차원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들을 하나의 용어로 표현함으로써 기존에 설명하거나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현상들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이러한 다차원성은 사회과학분야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시해준 것이다.

둘째, 사회적자본은 사회적 관계의 측면을 부각했다. 주로 사회학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오던 사회의 관계성의 외연을 확장하여 다양한 사회문제와 경제발전의 기반에 적용한 것이다. 기존 권력과 물질자본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사회현상들을

인간간의 신뢰성, 규범의 호혜성,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안에서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많은 사회적자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사회적자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회적자본의 긍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은 사회적자본이 사회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Coleman, 1988; Putnam, 1993; Fukuyama, 1995, Ostrom, 2000, Williamson, 1975). Coleman(1988)은 사회적자본인 개인과 집단의 사회구조가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보면서 사회적자본의 생산성을 강조한다. Putnam(1993)은 사회적자본의 증진은 민주주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인 동시에 공공재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합행동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책으로 간주한다. Fukuyama(1995)는 사회적자본을 제3의 자본으로 간주하면서, 특히 신뢰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적자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협력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Williamson(1975)은 사회적자본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회의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회적자본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거나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자본의 부정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도 있다(Bourdieu, 1986; Portes, 1998). 예를 들면 Bourdieu(1986)는 사회적자본을 개인이 동원가능한 연결망으로 봄으로써 자본주의 사회계급의 불평등이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Portes(1998)는 사회적자본이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은 다른 요소들을 통제한 후엔 허구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사회적자본이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지나친 헌신 또는 순응요구, 목표가 잘못된 강력한 결속력과 같은 사회적자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역기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회적자본의 정의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형태로 정의되어 왔다. 그 이유로는 사회적자본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다차원성 때문이다. 즉, 사회적자본은 다양

한 차원의 개념들이 합을 이뤄낸 결과로써 어떤 측면을 부각하는가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Putnam(1995)은 사회적자본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과 협동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의 조직적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자본의 형성을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매개로 하여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연결시켜 활성화된 사회적자본이 민주주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Fukuyama, 1995). Portes(1998)는 사회적 연결망 자체 혹은 사회적 연결망 속에 있는 사회구성원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적자본으로 정의한다. 그러므로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범위와 네트워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다른 조직과 구별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초점이 된다.

<표 2-1> 사회적자본의 정의

	사회적자본의 정의
Putnam(1995)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과 협동을 촉진하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의 조직적 특성
Portes(1998)	사회적 연결망 자체 혹은 사회적 연결망 속에 있는 사회구성원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
Bourdieu(1986)	제도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관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합
Coleman(1998)	시민들의 공유된 규범적 가치, 믿음, 그리고 사회 연결망
North(1990)	사회의 공식적 제도를 변화시키고 사람간의 교환에 있어 협동적인 해결을 위한 친밀한 환경을 형성하는 것
Fukuyama(1995)	집단 내 구성원들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것

Bourdieu(1986)는 “제도화와 관계 없이 지속적인 관계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합”이라고 사회적자본을 정의한다. 이를 통해 지속되는 기득권의 유지와 계급구조의 공고화를 주장하고 있다. Coleman(1988)은 사회적자본을 “시민들의 공유된 규범적 가치, 믿음, 그리고 사회 연결망”이라고 정의하면서,

사회적자본이 파편화된 개인들이 공동체내에서 경제를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Baker(1990)는 사회적자본을 “개인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특정 사회구조에서 행위자들이 이끌어 내는 자원” 으로 정의하고 있다. North(1990)는 사회적자본을 사람간 협동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친밀한 환경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회적자본을 통하여 정부, 법, 규제 등과 같은 공식적 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강조한다.

3. 사회적자본의 특징

사회적자본의 특징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다른 ‘자본’의 개념들과의 차이성을 부각하며 사회적자본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경제자본, 인적 자본, 문화자본과 같은 기존의 여러 형태의 자본과 유사점을 가진다. 예를 들면, 사회적자본을 소유한 행위자가 일정한 혜택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자본들과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 자본들과 구분짓는 차별성을 역시 보이고 있다. 경제자본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형태의 특성과는 달리 사회적자본은 만지거나 볼 수 있는 자본이 아니다(Portes, 1998). 또한 기술이나 지식의 형태로 존재하는 ‘인적 자본’과도 다르고 문화적 취향이나 성향의 형태로 존재하는 ‘문화자본’과도 차이점을 가진다. 유석춘 외(2003)는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의 차이점을 토대로 사회적자본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사회적자본은 개인이 보유한 자본이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에 내재한 자본이고 이익이 공동체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이익의 공유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자본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적자본을 매개로 한 교환관계는 영합(zero-sum) 관계가 아니고 정합(positive-sum)관계이며, 자본의 교환과정이 시간적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유석춘 외, 2003).

<표 2-2>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과 사회적자본의 비교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이론적 의의	화폐가 아닌 생산수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본	자본가에 의해서만 배타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자본의 개념에 대한 수정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불일치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계속에서 파생되는 자본
자본의 소유자	개인(자본가)	개인(노동자)	가족 전체 또는 가족의 개별구성원	집단(사회집단)
자본소유자에게 주는 이익	타인의 노동력에 대한 착취를 통한 경제적 이익	노동시장에서의 협상력 증대, 높은 임금	다른 계급과의 구별짓기와 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정보의 취득, 사회적 연대와 결속의 창출
연구의 핵심	자본가와 노동자사이의 계급적인 착취관계	교육과정과 임금사이의 연관성	문화자본을 통한 세대간 계급 재생산	개인 혹은 집단 사이의 관계유형
분석수준	구조(계급)	개인	가족	개인/집단

자료: 유석춘 외(2003)

사회적자본이 지니는 자본적 측면을 부각하는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박희봉, 2009). 첫째, 사회적자본은 미래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의 한 형태를 가진다. 사회적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자본은 다른 형태의 자본처럼 전용 및 변환할 수 있으나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특정한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셋째, 사회적자본은 거래가 불가능하며, 관계속에서 그 가치를 발휘한다는 공유재적 특징이 있다(박희봉, 2009). 넷째, 사회적자본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적 자본의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자원에 대해 대체물 또는 보완물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자본은 사용할수록 그 가치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진다(OECD, 2001).

제2절 사회적자본 연구의 기초

1. 사회적자본 연구의 다차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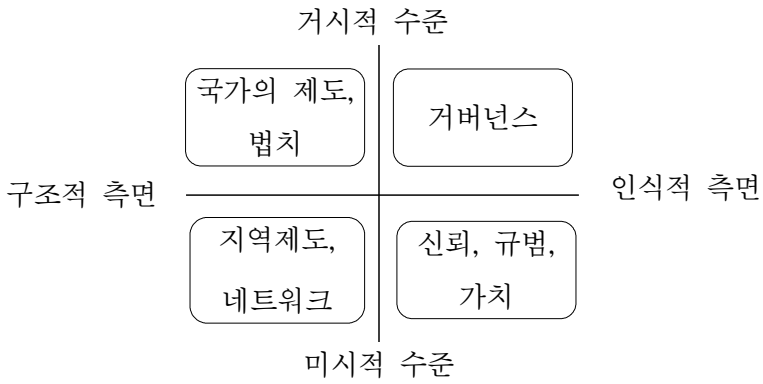
사회적자본의 연구를 위한 분석수준에 따라 개인을 분석단위 수준으로 하는 미시적 접근방법과 국가나 사회제도와 문화를 분석단위로 하는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시적 접근방법은 행위자를 중심으로 행위자가 속한 집단에서의 자원 접근정도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Lin, 2001). Bain & Hicks(1998)는 인식과 구조의 측면으로 나누어 인식적인 측면에서는 가치, 신뢰, 결속, 상호관계, 사회적 규범, 행태, 태도로 세분화하고 구조적 측면에서는 수평적 조직구조, 집단적/투명한 의사결정과정, 리더의 책임성, 집단적 행동 및 책임의 실행으로 나누어 사회적자본을 분석했다.

반면, 거시적 수준의 접근은 사회적자본을 사회나 국가의 제도와 문화가 함축하고 있는 신뢰나 규범의 호혜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사회 구성원의 참여정도와 연결시켜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을 분석한다. 예를 들면, 국가의 분권화 수준, 법률구조, 정책참여과정에 있어서 참여수준, 공동체 및 국가 연결망 체계, 사회통합 및 경제발전 등을 연구한다.

또한 사회적자본을 구조와 인식에 따라 분석하기도 한다(박희봉, 2009). 구조적 접근방법은 사회구조 내에서 행위자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총체주의적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Adler & Kwon, 2002). 공동체 내에 있는 개인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 집단의 특성을 사회적자본을 통하여 설명한다(Sander, 2002). 네트워크가 구조적 접근방법의 핵심개념으로써 행위자들 사이의 연결망의 특성과 행태에 초점을 맞춘다(고경훈 외, 2012). 인식적 측면은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들의 인식의 차이를 주로 설명의 대상으로 삼는다. 인식적 측면은 자원에 대한 표현, 해석, 의미, 시스템의 공유를 말하는 것으로써 구성원들이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조직이 필요로 하는 핵심가치와 역량을 인식하고 공동 목표달성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적 측면에 따라 가치창출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고경훈 외, 2012). Grootaert와 Van Bastelaer(2002)는 미시적/거시적 수준과 구조적/인식적 측면을 통합하여 사회적자본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연구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림 2-1> 사회적자본의 연구의 다양한 수준 및 측면



자료: Grootaert & Van Bastelaer(2002)

이외에도 관계적 차원을 토대로 사회적자본을 연구한다. 공동체 구성원간의 상호 신뢰를 중심으로 정보의 전달, 문제해결 비용, 도덕적 해이와 같은 문제를 관계적 차원에서 연구한다. 이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이익이나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고경훈 외, 2012).

2. 사회적자본 구성요소

사회적자본은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구성요소들의 다양성은 사회적자본의 측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다(Fukuyama, 199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구성요소들 중에서 사회적자본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인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신뢰

신뢰가 사회적자본의 구성요소인가 사회적자본 형성의 조건인가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사회적자본의 구성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신뢰를 “한 행위자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다른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행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즉 한 행위자가 선택하는 위험이 다른 행위자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상황인 것이다(Coleman, 1990). Fukuyama(1995)는 거시적 수준에서 국가의 신뢰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저 신뢰구조와 고 신뢰구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저 신뢰구조의 특징으로는 집합주의적 성향을 띠며 중개집단이 미약하고, 비효율적 대민행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고 신뢰구조의 특징은 고도의 상호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지방분권적 성격과 개인주의적 전통을 고수하는 특징을 보인다(Fukuyama, 1995).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적 신뢰의 개념과 거시적 수준에서 국가와 사회의 신뢰를 구분지어 설명하기도 한다.

2) 규범

공동체가 지니는 규범의 성격이 사회적자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규범은 공식적인 규칙과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공식적인 제도가 공정할수록 사회 구성원들은 제도가 정해놓은 규칙을 잘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도의 공정성이 사회적자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 사회 구성원들의 규범 확립이 어려워지는 것이다(박희봉, 2009). Ostrom(2000)은 공식적인 규칙과 제도 뿐만 아니라 인습적으로 사람들이 따르는 ‘관습’과 같은 비공식적 규범의 존재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의 기대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규범의 역할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Fukuyama(1995)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써 ‘집단의 구성원들이 협동할 수 있도록 서로 공유되고 있는 비공식적 가치와 규범’의 존재를 통하여 사회구성원들은 공동체내의 다른 구성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

3) 네트워크

규범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내에서의 사람들 사이의 역할과 역할관계는 네트워크 즉 연결망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망은 사회적자본을 이끌어내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조건이다(Coleman, 1988). 많은 학자들이 사회적자본의 핵심적 원천을 개인, 집단 및 조직의 네트워크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본질적으로 사회적자본이 가지고 있는 개인과 집단간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박희봉, 2009). 특히 다른 요소들, 즉 신뢰와 규범에 비해 네트워크는 좀 더 객관적이고 관찰이 가능하며 제도적으로 정형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유석춘 외, 2003).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 개방적/폐쇄적 네트워크처럼 연결망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4) 참여

Putnam(1993b)은 사회적자본을 사회적 규범, 신뢰, 네트워크를 구성요소로 보았으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규범의 요소를 제외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구성요소에 포함하여 지역사회 생활, 공공참여, 지역사회 자원봉사, 비공식적 사회성, 신뢰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다. Putnam(1993b)이 사회적자본으로써 참여를 포함시킨 이유는 소극적 참여가 참여하지 않는 것보다 사회적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박희봉, 2009). 수평적 참여와 수직적 참여, 사회단체의 참여와 정치적 단체, 종교단체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단체의 참여로 나누어 사회적자본을 파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3절 사회적자본의 연구경향

1. 사회적자본의 연구경향

본격적인 사회적자본의 연구가 시작된 1990년대 이후로 사회적자본에 대한 연구는 범위와 깊이를 확장해 나가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아직도 사회적자본에 대한 개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자들마다 사회적자본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측정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Daniere et al. 2002). 그러나 Durlauf(2002)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자본의 다양한 정의가 실증분석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사회적자본은 다양한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자본이 가지고 있는 다차원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 등의 구성요소들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있다.

사회적자본은 공동체적 관점, 네트워크 관점, 제도적 관점, 상승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김태룡, 2006). 예를 들면, Narayan & Cassidy(2001)은 집단성격, 규범, 사회성, 이웃관계, 자원봉사, 신뢰와 같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자본을 연구하고 있다. Coleman(1990)과 Bourdieu(1986)는 주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사회적자본을 연구하였다. 즉 다양한 관계의 특성에 초점을 두어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의 접근성 또는 네트워크 구조속에서 확보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진다(유석춘 외, 2003). 또한 제도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정치적·법적 제도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한다. Grootaert & Van Bastelaer(2002)는 수평적 조직, 시민사회, 사회적 통합, 법 체계, 그리고 거버넌스와 같은 제도적 측면을 통해 사회적자본을 연구한다. 김태룡(2006)은 공동체, 네트워크와 제도적 관점을 통합한 상승적 관점을 토대로 사회자본이 공동체 환경속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제도에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를 연구하였다.

2. 사회적자본의 실증연구

사회적자본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은 다양한 실증연구들로 이어져 왔다. 다양한 영역, 수준, 초점과 방법들이 사회적자본을 연구하는데 사용되었다. 사회적자본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자본을 때론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써 보기도 하고 때로는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로써 많은 실증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표 2-3> 사회적자본에 관한 다양한 실증연구

	사회적자본의 관한 실증연구
박통희(2010)	국가수준의 거시적 분석으로 다양한 가치관과 단체참여들이 사회적자본의 증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대인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
신영진(2007)	전자정부시대에 사회적자본의 확충에 관한 방안 제시
Moran(2005)	사회적자본의 구조적 배태성과 관계적 배태성이 관리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남
Koka · Prescott (2002)	조직수준에서의 사회적자본의 수준은 조직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지위 뿐만 아니라 조직간 협력의 형성 및 유지에도 영향
Luk외(2008)	사회적자본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도적 맥락안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줌
Durlauf(1999)	체제와 직업 뒤에 있는 사회적자본의 어두운 단면 표현
Claibourn · Martin (2007)	단체의 참여가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는 쉽게 하여 시민들의 정책평가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자발적 단체의 회원가입이 정책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제시
이재열(1998)	사회적자본의 구조적 요소가 시민들의 정치과정 참여와 민주적 행위의 규범을 향상시키는 동기가 되고 문화적 요소는 민주화의 미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룡(2006)	사회적자본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시민단체의 역할 발견
박희봉 · 이희창 · 조연상(2003)	사적 신뢰와 일반신뢰, 수직적 및 수평적 정치참여의 정부의 신뢰에 미치는 상당한 영향력 발견
이숙종 · 김희경 · 최준규(2008)	정부와 시민단체의 기관신뢰가 시민단체간 일반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상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력 발휘

박통희(2010)는 국가수준의 거시적 분석으로 다양한 가치관과 단체참여들이 사회적자본의 증진에 기여할 가능성이 큰 대인적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노동단체의 참여가 높은 나라에서 대인신뢰가 높다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사회적자본의 구성요소들의 관계를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다. 신영진(2007)은 전자정부시대에 사회적자본의 확충에 관한 방안을 중심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설계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oran(2005)은 관리자의 사회적자본이 관리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사회적자본의 구조적 배태성과 관계적 배태성이 관리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Koka & Prescott(200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자본이 조직의 수준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후, 조직수준에서의 사회적자본의 수준은 조직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지위 뿐만 아니라 조직간 협력의 형성 및 유지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준다. Luk외(2008)는 사회적자본이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제도적 맥락안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었다. 다른 형태의 조직혁신은 다른 제도적 맥락에 있는 사회적자본의 다른 형태에 의해 증진될 수 있다고 한다. Durlauf(1999)는 체제와 직업 뒤에 있는 사회적자본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Claibourn & Martin(2007)은 자발적 단체의 참여와 정치적 책임성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들은 단체의 참여가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는 쉽게 하여 시민들의 정책평가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하면서 자발적 단체의 회원가입이 정책 책임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제시한다. 이재열(1998)은 사회적자본이 민주적 시민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자본의 구조적 요소가 시민들의 정치과정 참여와 민주적 행위의 규범을 향상시키는 동기가 되고 문화적 요소는 민주화의 미덕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룡(2006)은 사회적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시민단체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의 역할이 사회적자본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박희봉・이희창・조연상(2003)은 사회적자본을 구성요소별로 분리하여 정부신뢰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적 신뢰와 일반신뢰, 수직적 및 수평적 정치참여가 정부의 신뢰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숙종・김희경・최준규(2008)은 사회적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함으로써 정부와 시민단체의 기관신뢰가 시민단체간 일반적인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상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지역 사회적자본의 실증연구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자본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수준의 사회적자본이 존재한다(Paxton, 1999). 물론 지역사회의 수준을 국가의 수준까지 확대 적용할 정도로 범위가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그러나 국가수준의 사회적자본의 범위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의미를 벗어나는 개념들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로 영역을 제한하며 직·간접적 접촉과 지역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토대로 지역 사회적자본의 연구로 한정할 필요가 존재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자본의 연구가 진행되어왔다(고경훈 외, 2012). 박희봉·김명환(2000)은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과 거버넌스, 시민사회의 능력에 관한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규범, 신뢰, 의사소통 채널이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최기조(2008)는 지역사회발전, 즉 지역혁신, 지역네트워크에 미치는 사회적자본의 역할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자본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소진광(2004)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사회적자본과 연결하여 조사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자본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매개변수로써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도록 해줄 수단으로 주장한다. 이곤수·송건섭(2007)은 지방정부의 시민접촉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사회적 규범, 수평적 연결망, 정부신뢰가 지방정부의 시민접촉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임승빈·이승종(2005)은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과 지역역량의 상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사회적자본과 지방정부의 역량의 상관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냈다. 송경재(2006)는 신뢰, 호혜적 규범, 수평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자본과 지방자치제의 성과의 관계를 대구, 광주, 대전 지역에 걸쳐 살펴보았다. 김명숙(2004)은 지역의 사회적자본과 지방정치와의 관계를 분석한 후,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지방정치에 대한 신뢰와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서순탁(2002)은 도시계획에서의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공식적 제도설계를 제시하고 있다. Bae(2005)는 로스엔젤레스에서 사회적자본

의 증진 과정을 인지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다양성과 상호작용이 시민참여의 네트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고 다양성과 대화가 신뢰에 영향을 주며, 네트워크와 신뢰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Woolcock(1998)은 사회적자본을 바탕으로 교섭과 대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문제해결을 할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

<표 2-4> 지역사회적자본의 실증연구

	지역 사회적자본의 연구
박희봉・김명환(2000)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미치는 지역사회 규범, 신뢰, 의사소통 채널의 영향력 발견
최기조(2008)	지역혁신, 지역네트워크에 미치는 사회적자본의 실질적 기여
소진광(2004)	사회적자본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매개변수로써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도록 해줄 수단으로 주장
이곤수・송건섭(2007)	사회적 규범, 수평적 연결망, 정부신뢰가 지방정부의 시민접촉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
임승빈・이승종(2005)	사회적자본과 지방정부의 역량의 상관성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남
송경재(2006)	신뢰, 호혜적 규범, 수평적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자본과 지방자치제의 성과의 관계 연구
김명숙(2004)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지방정치에 대한 신뢰와 상호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
서순탁(2002)	도시계획에서의 사회적자본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공식적 제도설계를 제시
Bae(2005)	지방정부에서 사회적자본의 증진 과정을 인지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
Woolcock(1998)	사회적자본을 바탕으로 교섭과 대화를 통해 지역공동체 문제해결을 할 프레임워크를 제공

제3장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의 실태

제1절 사회적자본에 관한 인지도 수준
제2절 사회적자본의 수준
제3절 사회적자본의 확충 정책

제3장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의 진단 및 시사점

제1절 사회적자본에 관한 인지도 분석

1. 조사의 개요

이 조사는 대전광역시의 시민들의 사회적자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시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하여 사회적자본의 측정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자본에 관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13년 7월에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관은 대전발전연구원이다.

설문의 응답자들을 먼저 성별, 연령, 학력 및 직업별로 살펴본 결과, 기술통계 결과는 <표 3-1>과 같다. 성별로는 전체 722명중 남성은 362명(50.1%), 여성은 360명(49.9%)으로 응답자의 성별은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142명(19.7%), 30대 156명(21.6%), 40대 167명(23.1%), 50대 139명(19.3%), 60대 111명(15.4%), 70대 7명(1%)의 분포를 보인다. 응답자의 학력은 중졸이하 46명(6.4%), 고졸 278명(38.5%),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교졸 365명(50.6%), 대학원졸 33명(4.6%)으로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농업・어업・임업 5명(0.7%), 자업업 148명(20.5%), 판매 및 서비스업 95명(13.2%), 기능 및 숙련공 10명(1.4%), 일반작업직 20명(2.8%), 사무 및 기술직 155명(21.5%), 경영 및 관리직 18명(2.5%), 전문직 61명(8.4%), 가정주부 110명(15.2%), 학생 58명(8.0%), 은퇴 및 퇴직자 14명(1.9%), 무직 24명(3.3%), 기타 4명(0.6%)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거주지로는 서구지역 거주자가 225명(31.2%)으로 가장 많은 참여를 했고 그 외 지역 즉, 동구 117명(16.2%), 중구 131명(18.1%), 서구, 유성구 143명(19.8%), 대덕구 106명(14.7%)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설문에 응답했다.

<표 3-1> 성별・연령・학력・직업・거주지별 기술통계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성별	남성	362	50.1
	여성	360	49.9
	합계	722	100.0
연령	20대	142	19.7
	30대	156	21.6
	40대	167	23.1
	50대	139	19.3
	60대	111	15.4
	70대	7	1.0
	합계	722	100.0
학력	중졸이하	46	6.4
	고졸	278	38.5
	대학교졸(전문대포함)	365	50.6
	대학원졸	33	4.6
	합계	722	100.0
직업	농업・어업・임업	5	0.7
	자영업	148	20.5
	판매업・서비스업	95	13.2
	기능・숙련공	10	1.4
	일반작업직	20	2.8
	사무직・기술직	155	21.5
	경영・관리직	18	2.5
	전문・자유직	61	8.4
	가정주부	110	15.2
	학생	58	8.0
	은퇴・퇴직자	14	1.9
	무직	24	3.3
	기타	4	0.6
	합계	722	100.0
거주지	동구	117	16.2
	중구	131	18.1
	서구	225	31.2
	유성구	143	19.8
	대덕구	106	14.7
	합계	722	100.0

다음으로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 주거형태, 대전시 거주기간, 주택소유형태에 관한 사항은 <표 3-2>와 같다. 응답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400만원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394명(54.6%)으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상당부분은 아파트에 거주 하고 있고(63.4%), 20년 이상 거주자는 50.4% 이며,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응답자는 75.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가구소득・주거형태・거주기간・주택소유형태별 기술통계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124	17.2
	201~300만원	226	31.3
	301~400만원	168	23.3
	401~500만원	79	10.9
	501~600만원	69	9.6
	601만원이상	34	4.7
	모름	22	3.0
	합계	722	100.0
주거형태	주상복합	14	1.9
	단독주택	139	19.3
	아파트	458	63.4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108	15.0
	기타	3	0.4
	합계	722	100.0
대전시 거주기간	3년이하	21	2.9
	4~6년	52	7.2
	7~10년	89	12.3
	11~13년	54	7.5
	14~16년	55	7.6
	17~20년	87	12.0
	20년이상	364	50.4
	합계	722	100.0
주택소유 형태	자택	548	75.9
	전세	131	18.1
	월세	43	6.0
	합계	722	100.0

2. 전반적 사회적자본에 대한 인지여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사회적자본에 대한 기존의 인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처음에는 사회적자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사회적자본 인지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전시의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76.7%가 “모른다”라고 응답하였고, 23.3%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대전시의 사회적자본 사업에 대해 많은 대전시민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3-3> 참조).

<표 3-3>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인지도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사회적자본 인지여부	알고있다	168	23.3
	모른다	554	76.7
	합계	722	100.0

대전광역시의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지한 경로에 대한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방송(41.1%), 신문(24.4%),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12.5%)의 경로를 통해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3-4> 참조).

<표 3-4> 사회적자본 인지경로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사회적자본 인지경로	신문	41	24.4
	방송	69	41.1
	포스터	3	1.8
	현수막	4	2.4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21	12.5
	친구 및 동료	8	4.8
	교육훈련기관	11	6.5
	트위터 등 SNS	11	6.5
	합계	168	100.0

3. 사회적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한 인지도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형태가 없는 자본” 이라는 사회적 자본의 정의를 설명한 후, 대전지역에서 사회적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에 대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역네트워크 확대가 27.7%, 자발적 참여의 확대가 27.7%, 신뢰증진이 26.3%, 사회적 규범의 확립이 18.0%로 나타났다(<표 3-5> 참조).

<표 3-5>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중요 요인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사회적자본 증진요인	신뢰증진	190	26.3
	사회적 규범 확립	130	18.0
	지역네트워크확대	200	27.7
	자발적 참여확대	200	27.7
	기타	2	0.3
	합계	722	100.0

사회적자본 구성요소 중 전반적인 신뢰의 증진을 위해 어떤 영역의 신뢰를 증진시켜야 하는가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시민들은 공공기관의 신뢰가 51.0%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개인수준의 신뢰가 17.2%, 의사전달매체의 신뢰가 16.2%, 사회단체의 신뢰가 15.7%로 나타났다(<표 3-6> 참조).

<표 3-6> 전반적 신뢰증진을 위한 영역별 신뢰 중요 영역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영역별 신뢰 중요도	개인수준	124	17.2
	공공기관	368	51.0
	사회단체	113	15.7
	의사전달매체	117	16.2
	합계	722	100.0

개인적 차원의 신뢰 중, 가장 우선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신뢰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웃간의 신뢰가 40.2%와 가족간의 신뢰가 25.1%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각종 모임 구성원들과의 신뢰가 14.0%, 직장동료간 신뢰가 12.3%로 나타났고, 친구가 4.4%, 친족이 4.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표<3-7> 참조).

<표 3-7> 개인적 차원의 신뢰 증진을 위한 중요 영역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개인적 차원 신뢰 증진 중요도	가족	181	25.1
	친족	29	4.0
	친구	32	4.4
	이웃	290	40.2
	직장동료	89	12.3
	각종모임 구성원	101	14.0
	합계	722	100.0

공공제도 및 기관 신뢰에 있어 가장 먼저 증진시켜야 할 신뢰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응답한 과반수 이상의 시민들이 시청(33.5%)과 시의회(18.7%)가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또는 제도의 신뢰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구청이 9.8%, 지방경찰청이 9.3%, 지방교육청이 9.3%, 구의회가 6.9%, 동사무소가 6.9%, 지방법원이 5.5%의 순서로 답하였다(<표 3-8> 참조).

<표 3-8> 공공기관 및 제도 신뢰 증진을 위한 중요 영역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공공기관 및 공공제도 신뢰 증진 중요도	시청	242	33.5
	시의회	135	18.7
	구청	71	9.8
	구의회	50	6.9
	동사무소	50	6.9
	지방경찰청	67	9.3
	지방법원	40	5.5
	지방교육청	67	9.3
	합계	722	100.0

공공기관 종사자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신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47.4%)이라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그 뒤로 지방의원이 17.9%, 교육공무원이 13.3%, 경찰공무원이 13.2%를 차지했고, 법원공무원이 4.3%와 지방공기업직원이 4.0%로 적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표3-9> 참조).

<표 3-9> 공공기관 종사자 신뢰 증진을 위한 중요 영역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공공기관 종사자 신뢰 증진 중요도	지방자치단체공무원	342	47.4
	지방의원	129	17.9
	경찰공무원	95	13.2
	법원공무원	31	4.3
	교육공무원	96	13.3
	지방공기업직원	29	4.0
	합계	722	100.0

사회기관 신뢰 중 가장 우선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영역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언론기관의 신뢰(34.5%)와 시민단체의 신뢰(27.7%)가 응답자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지역기업(15.7%), 노동조합(9.4%), 각급학교(6.8%), 종교단체(6.0%)의 순서대로 응답하였다(<표 3-10> 참조).

<표 3-10> 사회기관 신뢰 증진을 위한 중요영역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사회기관 신뢰 증진 중요 영역	종교단체	43	6.0
	노동조합	68	9.4
	지역기업	113	15.7
	각급 학교	49	6.8
	시민단체	200	27.7
	언론기관	249	34.5
	합계	722	100.0

의사전달매체 신뢰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응답자 대다수는 TV 및 방송매체의 신뢰(61.5%), 인터넷 매체(22.0%), 신문 및 잡지(10.8%)가 중요한 영역으로 선택하였다. 그 외에 대면접촉(3.9%), 전단지 및 포스터(1.8%)를 응답하였다(<표 3-11> 참조).

<표 3-11> 의사전달매체 신뢰 증진을 위한 중요영역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의사전달매체 신뢰 증진 중요 영역	TV 및 방송	444	61.5
	신문 및 잡지	78	10.8
	인터넷매체	159	22.0
	전단지 및 포스터	13	1.8
	대면접촉	28	3.9
	합계	722	100.0

대전광역시의 전반적인 사회적 규범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한 것은 부정부패근절(39.8%), 시민의식함양(32.1%), 공공질서확립(28.1%)의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부정부패근절이 시민의식함양과 공공질서 확립보다 대전광역시 사회적 규범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전광역시 시민들은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3-12> 참조).

<표 3-12> 사회적 규범 향상 중요 요인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사회적 규범 향상을 위한 중요 요인	공공질서 확립	203	28.1
	시민의식 함양	232	32.1
	부정부패 근절	287	39.8
	합계	722	100.0

사회적 규범 형성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는 가정교육(27.1%), 공익캠페인(24.7%), 시민교육(24.4%), 학교교육(23.4%) 순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표 3-13> 참조).

<표 3-13>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방법의 중요도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방법의 중요도	가정교육	196	27.1
	학교교육	169	23.4
	시민교육	176	24.4
	공익적 캠페인	178	24.7
	기타	3	0.4
	합계	722	100.0

시민의식함양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가장 먼저 근절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응답으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36.1%)을 가장 먼저 근절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으로 뇌물수수(26.9%)와 탈세(23.3%)라고 응답했고 교통법규 위반(13.7%)이 가장 적은 응답을 했다(<표 3-14> 참조).

<표 3-14>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중요 요인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중요 요인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261	36.1
	교통법규 위반	99	13.7
	탈세	168	23.3
	뇌물수수	194	26.9
	합계	722	100.0

다음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청렴해야 할 대상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치인(60%)로 가장 많은 응답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공무원(23.5%)이 차지했다. 그 외 언론인(5.0%), 교육자(4.6%), 일반시민(4.2%), 기업인(2.8%)의 순서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대전시민들은 정치인과 공무원의 청렴도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앞장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3-15> 참조).

<표 3-15> 부정부패근절을 위한 중요 대상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중요 대상	일반시민	30	4.2
	정치인	433	60.0
	공무원	170	23.5
	기업인	20	2.8
	교육자	33	4.6
	언론인	36	5.0
	합계	722	100.0

다음은 준법의식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대전시민들은 법집행의 공정성(35.6%)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법집행의 투명성(19.7%), 법집행의 일관성(13.9%), 법집행의 엄격성(10.9%), 법집행기관 공직자의 신뢰(10.2%), 법집행기관의 신뢰(9.7%)의 순서로 응답했다(<표 3-16> 참조).

<표 3-16> 준법의식 증진을 위한 중요 요인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준법의식 증진을 위한 중요 요인	법집행의 공정성	257	35.6
	법집행의 일관성	100	13.9
	법집행의 엄격성	79	10.9
	법집행의 투명성	142	19.7
	법집행기관의 신뢰	70	9.7
	법집행기관 공직자의 신뢰	74	10.2
	합계	722	100.0

다음은 지역네트워크에 관한 질문으로써 대전지역에서 바람직한 사회적자본의 증진을 위해 중요한 활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봉사단체(40.0%)이 가장 중요한 모임활동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정당(18.0%), 노동조합(11.9%), 종교활동(7.8%), 동호회(7.2%), 반상회(6.4%), 친목회(5.4%), 학부모 모임(3.0%) 순으로 조사됐다(<표 3-17> 참조).

<표 3-17>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중요 지역네트워크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중요 지역네트워크	종교활동	56	7.8
	학부모 모임	22	3.0
	동호회	52	7.2
	노동조합	86	11.9
	정당	130	18.0
	친목회	39	5.4
	봉사단체	289	40.0
	반상회	46	6.4
	기타	2	0.3
	합계	722	100.0

다음 <표 3-18>은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이나 모임에 있어 각각의 모임이 사회적자본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3-18>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각종 지역네트워크 중요도

	매우 많이 기여	많이 기여	보통	적게 기여	매우적게 기여	합계
반상회	30 (4.2%)	151 (20.9%)	272 (37.7%)	150 (20.8%)	119 (16.5%)	722 (100%)
친목회	35 (4.8%)	149 (20.6%)	294 (40.7%)	153 (21.2%)	91 (12.6%)	722 (100%)
학부모 모임	21 (2.9%)	140 (19.4%)	296 (41.0%)	151 (20.9%)	114 (15.8%)	722 (100%)
동호회	26 (3.6%)	167 (23.1%)	308 (42.7%)	151 (20.9%)	70 (9.7%)	722 (100%)
종교단체	66 (9.1%)	217 (30.1%)	250 (34.6%)	94 (13.0%)	95 (13.2%)	722 (100%)
노동조합	37 (5.1%)	202 (28.0%)	302 (41.8%)	87 (12.0%)	94 (13.0%)	722 (100%)
정당	46 (6.4%)	211 (29.2%)	250 (34.6%)	98 (13.6%)	117 (16.2%)	722 (100%)
봉사단체	128 (17.7%)	299 (41.4%)	195 (27.0%)	52 (7.2%)	48 (6.6%)	722 (100%)
선거	94 (13.0%)	242 (33.5%)	248 (34.3%)	79 (10.9%)	59 (8.2%)	722 (100%)
시정참여	94 (13.0%)	259 (35.9%)	227 (31.4%)	56 (7.8%)	86 (11.9%)	722 (100%)

다음은 대전지역의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참여방법에 대하여 응답이다(<표 3-19> 참조). 대다수의 시민들은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중요한 참여방법으로 정책결정과정상 공식적 참여(39.1%)와 비공식적 의견제시(35.9%)를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사회단체의 회원가입, 회비납부 외에도 적극적 활동을 포함하는 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13.9%), 사회단체의 회원가입과 회비납부 등을 위주로 하는 소극적 참여(6.2%), 적극적 정당활동(3.5%), 소극적 정당활동(1.5%)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표 3-19>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중요 참여방법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중요 참여방법	정책결정과정 비공식적 의견제시	259	35.9
	정책결정과정 공식적 참여	282	39.1
	사회단체의 소극적 참여	45	6.2
	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	100	13.9
	소극적 정당활동	11	1.5
	적극적 정당활동	25	3.5
	합계	722	100.0

다음은 대전지역의 시민들은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에 참여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단체의 순수성(46.0%)과 지역사회단체의 영향력(33.0%)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지역사회단체의 사회적 지명도(10.7%), 지역사회단체 구성원 및 임원진의 우수성(7.1%), 지역사회단체 참여에 대한 보상(3.3%)의 순으로 드러났다(<표 3-20> 참조).

<표 3-20>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 참여시 고려사항

구분		빈도(단위: 명)	분포(단위: %)
지역사회단체/기관 참여시 고려사항	사회단체의 순수성	332	46.0
	사회단체의 사회적 지명도	77	10.7
	사회단체의 사회적 영향력	238	33.0
	사회단체 구성원 및 임원진 우수성	51	7.1
	사회단체 참여에 대한 보상	24	3.3
	합계	722	100.0

4. 조사결과의 시사점

이번 조사의 목적은 지금까지 대전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자본에 관한 다양한 사항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전 시민들의 사회적자본에 대한 인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 시민들의 사회적자본에 대한 전반적 인지에 관한 것이다. 분석결과, 사회적자본을 위한 대전시의 사업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76.7%를 차지하는 것을 통해 대전 시민들은 아직까지 사회적자본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책의 순응과 효과적 적용은 정책 대상자들의 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자본 및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더 많은 사회적자본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적자본에 대해 인지했던 대전 시민들은 주로 방송(41.1%)과 신문(24.4%)을 통해서 사회적자본 및 사업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정책의 홍보를 위해 방송 및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를 사용하여 알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적자본의 구성요소에 관한 분석이다. 대전 시민들은 대전시의 사회적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 네트워크(27.7%), 시민들의 참여(27.7%), 신뢰(26.3%)를 사회적 규범(18.0%)에 비해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회적 규범의 확립 역시 많은 대전 시민들이 사회적자본의 증진요인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사회적자본의 확충사업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사회적자본의 구성요소 중 신뢰부문에 있어서 대전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신뢰는 공공기관의 신뢰(51.0%)로 나타났다. 이는 과반수 이상의 대전 시민들이 공공기관의 신뢰의 증진을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신뢰가 지역 사회적자본의 영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적 수준의 신뢰 증진에 있어서 이웃과의 신뢰(40.2%)와 가족간의 신뢰(25.1%)가 상당부분을 차지한 것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뢰가 개인적 신뢰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및 제도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대전 시민들은 시청의 신뢰(33.5%)와 시의회(18.7%)의 신뢰가 우선적으로 증진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 이것은 시청과 시의회의 신뢰 증진이 지역 사회적자본

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점에서 공공기관 신뢰증진을 위해서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신뢰 증진(47.4%)을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지방의원, 법원・교육・경찰공무원 및 지방교육청 공무원에 비해 공공기관 신뢰에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기관의 신뢰증진을 위해서는 언론기관(34.5%)과 시민단체(27.7%)의 신뢰가 다른 사회기관 또는 단체(종교단체, 노동조합, 지역기업, 각급 학교)에 비해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전달매체의 신뢰는 TV・방송의 신뢰(61.5%)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인터넷매체의 신뢰(22.0%)도 다른 매체(신문・잡지, 전단지, 대면접촉)에 비해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것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사회규범의 향상에 대하여 부정부패근절(39.8%)이 근소하게 시민의식함양(32.1%)과 공공질서 확립(28.1%)에 비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부정부패 근절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함양과 공공질서 확립의 중요성도 대전시의 사회규범 향상에 있어서 간과될 수 없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공공질서 확립에 있어서 가정교육, 공익적 캠페인, 시민교육, 학교교육 모두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했다.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서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36.1%)이 뇌물수수(26.9%)와 탈세(23.3%), 교통법규 위반(13.7%)에 비해 시급히 근절해야 할 요인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부패근절을 위해 가장 청렴해야 할 대상으로 정치인(60.0%)와 공무원(23.5%)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응답을 하였다. 이것은 공공부문에 있는 종사자들의 부정부패가 지역 사회적자본의 약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준법의식을 증진시키는데 법집행의 공정성(35.6%)과 투명성(19.7%)이 법집행의 일관성(13.9%), 법집행의 엄격성(10.9%), 법집행기관 공직자의 신뢰(10.2%), 법집행기관의 신뢰(9.7%)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봉사단체(40.0%)를 가장 많은 응답자가 선택함으로써 봉사단체의 활동이 바람직한 사회적자본의 증진에 다른 활동(종교활동, 학부모모임, 동호회, 노동조합, 정당, 친목회, 반상회)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역 사회적자본의 증진하기 위한 참여방법으로 대전 시민들은 주로 공공기관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식적 참여(39.1%)와 비공식적 참여(35.9%)를 사회단체의 참여와 정당 활동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청회나 자문위원회, 시민 아이디어 제안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대전 시민들은 시민사회단체 및 기관에 참여를 결정할 때, 지역사회단체의 순수성(46.0%)과 지역 사회단체의 사회적 영향력(33.0%)을 사회단체의 지명도, 사회단체 구성원 및 임원진의 우수성, 사회단체 참여에 대한 보상보다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2절 사회적자본의 수준 진단

1. 조사의 개요

본 조사는 대전시 사회적자본의 수준을 진단하여, 그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2년 11월 19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대전광역시 거주자 1,01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관은 대전발전연구원 사회적자본연구센터이다.

응답자의 주요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424명(41.8%), 여성이 590명(58.2%)이며, 지역별로는 동구가 205명(20.2%), 중구가 201명(19.8%), 서구가 202명(19.9%), 유성구가 204명(20.1%0, 대덕구가 202명(19.9%) 등이 응답했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27명(2.7%), 고졸이 491명(48.4%), 대졸(전문대포함)이 430명(42.4%), 대학원 졸이 47명(4.6%), 그리고 기타가 19명(1.9%) 등이다. 그리고 주거형태별로는 주상복합이 34명(3.4%), 단독주택이 146명(14.4%), 아파트가 646(63.7%),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 161명(15.9%), 기타가 27명(2.7%)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당 월평균 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이 304명(30.0%), 200～400만원 미만이 468명(46.2%), 400～

600만원 미만이 174명(17.2%), 600～800만원 미만이 32명(3.2%), 800～1000만원 미만이 26명(2.6%), 1000만원 이상이 10명(1.0%) 등이 응답하였다. 주택의 소유 형태별로는 자택이 602명(59.4%), 전세가 302명(29.8%), 월세가 110명(10.8%) 이다. 사회(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가 203명(20.0%), 중도가 488명(48.1%), 진보가 230명(22.7%), 기타 93명(9.2%) 등으로 나타났다.

2. 조사결과의 분석

1) 일반국민에 대한 신뢰수준

대전 시민 1,014명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신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43.0%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거나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49.6%로 나타났으며,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7.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전 시민들은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에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1> 일반국민들에 대한 신뢰 수준

항목	항상 조심해야 한다	대체로 조심해야 한다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항상 신뢰할 수 있다	모르겠다	무응답	합계
빈도	134	369	423	13	69	6	1014
%	13.2	36.4	41.7	1.3	6.8	0.6	100.0

2) 사람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대전 시민 1,014명을 대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귀하를 이용하려든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공정하게 대하려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항상 공정하게 대하려고 한다거나 대체로 공정하게 대하려고 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53.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체로 이용하려 한다거나 항상 이용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31.1%로 나타났으며, 모르겠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15.5%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전 시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를 공정하게 대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2> 사람들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항목	항상 이용하려 한다	대체로 이용하려 한다	대체로 공정하게 대하려고 한다	항상 공정하게 대하려고 한다	모르겠다	무응답	합계
빈도	26	289	486	56	150	7	1014
%	2.6	28.5	47.9	5.5	14.8	0.7	100.0

3) 사람들 간의 신뢰수준

대전 시민 1,014명을 대상으로 다른사람들에 대한 신뢰 수준을 측정해 본 결과, 신뢰수준이 높은 순서는 “가족간 →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 → 이웃간 → 종교가 다른 사람 → 다른 나라 사람 → 처음만나는 사람”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하지 않는다거나 보통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9.1%에 불과해 대전 시민들이 가족에게 느끼는 신뢰도는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23> 사람들 간의 신뢰 수준

대상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신뢰 한다	완전히 신뢰한다	무응답	합계
1) 가족	빈도	5	11	76	376	541	5	1014
	%	0.5	1.1	7.5	37.1	53.4	0.5	100.0
2) 이웃	빈도	32	111	477	368	19	7	1014
	%	3.2	10.9	47.0	36.3	1.9	0.7	100.0
3)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빈도	14	52	414	475	52	7	1014
	%	1.4	5.1	40.8	46.8	5.1	0.7	100.0
4) 처음 만남 사람	빈도	164	374	412	52	6	6	1014
	%	16.2	36.9	40.6	5.1	0.6	0.6	100.0
5) 종교가 다른 사람	빈도	87	208	614	89	8	8	1014
	%	8.6	20.5	60.6	8.8	0.8	0.8	100.0
6) 다른 나라 사람	빈도	103	267	556	73	7	8	1014
	%	10.2	26.3	54.8	7.2	0.7	0.8	100.0

4) 동네 주민관계에 대한 인식

동네 주민관계에 대한 5개의 조사문항에 대하여, 우리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와도 지나치게 경계를 하지 않는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고, 일반적인 동네 주민들 사이의 믿음에 대한 평가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3-24> 동네 주민관계에 대한 인식

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계
1) 우리 동네 대부분의 주민들을 신뢰한다.	빈도	38	154	553	242	18	9	1014
	%	3.7	15.2	54.5	23.9	1.8	0.9	100.0
2) 우리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지나치게 경계하지 않는다.	빈도	34	184	470	292	24	10	1014
	%	3.4	18.1	46.4	28.8	2.4	1.0	100.0
3) 우리 동네 주민들 사이에는 유대관계가 두텁다.	빈도	53	241	530	168	12	10	1014
	%	5.2	23.8	52.3	16.6	1.2	1.0	100.0
4) 우리집 열쇠를 이웃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하지 않다.	빈도	237	266	312	148	40	11	1014
	%	23.4	26.2	30.8	14.6	3.9	1.1	100.0
5) 우리 동네 주민들 사이에는 충분한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	빈도	83	239	522	145	17	8	1014
	%	8.2	23.6	51.5	14.3	1.7	0.8	100.0

5) 이웃 간의 교류에 대한 질문

이웃간의 교류에 대한 5개의 조사문항에 대하여, 이웃간 서로서로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문항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이웃간에 야유회 등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한 조사문항은 5개 중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표 3-25> 이웃 간의 교류에 대한 질문

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계
1) 평상시 거리낌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	빈도	92	251	321	292	49	9	1014
	%	9.1	24.8	31.7	28.8	4.8	0.9	100.0
2) 이웃 사람들과 작은 도움을 주고 받는다.	빈도	66	179	369	361	29	10	1014
	%	6.5	17.7	36.4	35.6	2.9	1.0	100.0
3) 이웃과 경조사 연락을 하고 부조도 주고 받는다.	빈도	117	235	340	283	31	8	1014
	%	11.5	23.2	33.5	27.9	3.1	0.8	100.0
4) 걱정거리가 있을 때 상의할 이웃이 있다.	빈도	132	245	331	272	26	8	1014
	%	13.0	24.2	32.6	26.8	2.6	0.8	100.0
5) 가끔 이웃과 야유회 등을 즐긴다.	빈도	200	288	317	176	23	10	1014
	%	19.7	28.4	31.3	17.4	2.3	1.0	100.0

6) 동네 사람들의 시민의식

자기 동네 사람들의 시민의식에 대한 5개의 조사문항 중 동네의 보도, 벽, 공중시설에 대한 낙서 등이 어느정도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늦은 밤 소음의 정도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6> 동네 사람들의 시민의식

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계
1) 우리 동네 주민은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빈도	38	145	532	270	21	8	1014
	%	3.7	14.3	52.5	26.6	2.1	0.8	100.0
2) 우리 동네는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거나, 분리수거가 잘된다.	빈도	29	146	362	402	68	7	1014
	%	2.9	14.4	35.7	39.6	6.7	0.7	100.0
3) 우리 동네의 보도, 벽, 공중시설 등에는 낙서가 많다.	빈도	100	404	401	90	11	8	1014
	%	9.9	39.8	39.5	8.9	1.1	0.8	100.0
4) 우리 동네의 공공시설(체육시설, 공중화장실, 공중수도 등)이 자주 파손되는 일이 많다.	빈도	61	383	460	90	10	10	1014
	%	6.0	37.8	45.4	8.9	1.0	1.0	100.0
5) 우리 동네는 밤늦은 시간에 시끄럽고 소음이 많다.	빈도	104	347	407	120	29	7	1014
	%	10.3	34.2	40.1	11.8	2.9	0.7	100.0

7) 동네의 공공문제 해결 역량

동네의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동참 의지 등에 대한 5개 문항 중에서, 동네의 치안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문항이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동네의 불량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동참의지의 물음에 대한 응답이 가장 부정적이다.

<표 3-27> 동네의 공공문제 해결 역량

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계
1) 청소년들이 동네에서 불량한 행동을 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함께 나서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빈도	62	263	433	235	14	7	1014
	%	6.1	25.9	42.7	23.2	1.4	0.7	100.0
2) 우리 동네에 치안문제가 발생하면,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빈도	40	238	455	259	15	7	1014
	%	3.9	23.5	44.9	25.5	1.5	0.7	100.0
3) 우리 동네 사람들은 공동으로 동네문제를 해결할 자신감이 있다.	빈도	38	265	502	189	10	10	1014
	%	3.7	26.1	49.5	18.6	1.0	1.0	100.0
4) 우리 동네사람들은 동네일에 많은 관심이 있다.	빈도	44	262	492	198	11	7	1014
	%	4.3	25.8	48.5	19.5	1.1	0.7	100.0
5) 우리 동네에서 학교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회의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	빈도	47	190	515	232	22	8	1014
	%	4.6	18.7	50.8	22.9	2.2	0.8	100.0

8)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참여도

대전 시민 1,014명을 대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있으면, 모두 표시해달라는 물음에 종교단체를 제외하고 레크레이션 및 스포츠 활동을 하는 단체에 가장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참여는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참여도

항목	빈도	%
① 종교집단	275	35.0
② 스포츠・레크레이션	171	21.8
③ 예술 혹은 교육・문화적 활동	138	17.6
④ 노동단체	15	1.9
⑤ 정당	9	1.1
⑥ 환경보호단체	15	1.9
⑦ 전문가협회	15	1.9
⑧ 인권단체	6	0.8
⑨ 자선단체	25	3.2
⑩ 소비자보호단체	16	2.0
⑪ 친목단체 (계모임, 친목회, 동창회, 산악회, 복지관, 부녀회, 생활체조회, 대한민국 사진작가 협회,부채춤, 에어로빅, 금강대도, 기모임, 재향군인회 등)	79	10.1
⑫ 기타 (운동회, 서구자활센터, 성락복지관, 월드비전, 아트시네마, 조기축구회, 회사동료, 계모임, 복지관 등)	21	2.7
전체	785	100.0

9) 국가(중앙)의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대전 시민 1,014명을 대상으로 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시회기관들에 대한 신뢰도를 물어본 결과, 중앙의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금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국회에 대해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질문한 결과,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매우 낮은 비율인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 월등히 높은 61.3%로 나타났다. ②정당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매우 낮은 비율인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

정적인 응답보다 월등히 높은 61.3%로 나타났다. ③행정부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국회나 정당보다는 약간 높은 비율인 6.4%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높은 45.7%로 나타났다. ④사법부(법원)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행정부보다는 약간 높은 8.1%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높은 46.0%로 나타났다. ⑤검찰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사법부(법원)보다는 약간 높은 9.3%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높은 44.9%로 나타났다. ⑥경찰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검찰보다는 높은 15.6%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약간 높은 34.3%로 나타났다. ⑦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20.8%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약간 높은 26.0%로 나타났다. ⑧교육계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7.2%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약간 높은 28.4%로 나타났다. ⑨신문사에 대해서는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2.9%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높은 36.3%로 나타났다. ⑩TV 방송국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4.2%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높은 32.1%로 나타났다. ⑪의료계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21.5%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과 비슷한 22.0%로 나타났다. ⑫대기업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높은 33.8%로 나타났다. ⑬중소기업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5.2%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약간 높은 22.4%로 나타났다.

<표 3-29> 국가(중앙)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항 목		매우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보통	신뢰함	매우 신뢰함	무응답	합계
1) 국회	빈도	204	418	358	25	2	7	1014
	%	20.1	41.2	35.3	2.5	0.2	0.7	100.0
2) 정당	빈도	192	430	355	26	2	9	1014
	%	18.9	42.4	35.0	2.6	0.2	0.9	100.0
3) 행정부	빈도	122	342	476	62	3	9	1014
	%	12.0	33.7	46.9	6.1	0.3	0.9	100.0
4) 사법부(법원)	빈도	129	338	456	78	4	9	1014
	%	12.7	33.3	45.0	7.7	0.4	0.9	100.0
5) 검찰	빈도	123	333	456	92	2	8	1014
	%	12.1	32.8	45.0	9.1	0.2	0.8	100.0
6) 경찰	빈도	84	264	498	147	11	10	1014
	%	8.3	26.0	49.1	14.5	1.1	1.0	100.0
7) 금융기관	빈도	60	204	528	191	20	11	1014
	%	5.9	20.1	52.1	18.8	2.0	1.1	100.0
8) 교육계	빈도	62	226	544	163	11	8	1014
	%	6.1	22.3	53.6	16.1	1.1	0.8	100.0
9) 신문사	빈도	88	280	507	122	9	8	1014
	%	8.7	27.6	50.0	12.0	0.9	0.8	100.0
10) TV 방송국	빈도	79	246	536	133	11	9	1014
	%	7.8	24.3	52.9	13.1	1.1	0.9	100.0
11) 의료계	빈도	50	173	564	196	22	9	1014
	%	4.9	17.1	55.6	19.3	2.2	0.9	100.0
12) 대기업	빈도	87	256	544	107	11	9	1014
	%	8.6	25.2	53.6	10.6	1.1	0.9	100.0
13) 중소기업	빈도	44	184	621	135	19	11	1014
	%	4.3	18.1	61.2	13.3	1.9	1.1	100.0

10) 대전의 주요 사회기관(사람)에 대한 신뢰도

대전시의 주요 사회기관 13개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서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단체는 동사무소이며 다음으로 풀뿌리 운동단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대전광역시의회와 자치구의회에 대한 순으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3-30> 대전의 주요 사회기관(사람)에 대한 신뢰도

항 목		매우 신뢰하지 않음	신뢰하지 않음	보통	신뢰함	매우 신뢰함	무응답	합계
1) 대부분의 대전 시민 (동료시민)	빈도	37	119	675	172	3	8	1014
	%	3.6	11.7	66.6	17.0	0.3	0.8	100.0
2) 대전광역시청	빈도	41	185	640	137	2	9	1014
	%	4.0	18.2	63.1	13.5	0.2	0.9	100.0
3) 대전광역시 의회	빈도	65	263	583	92	2	9	1014
	%	6.4	25.9	57.5	9.1	0.2	0.9	100.0
4) 자치구청	빈도	47	196	637	123	2	9	1014
	%	4.6	19.3	62.8	12.1	0.2	0.9	100.0
5) 동사무소	빈도	38	121	581	258	8	8	1014
	%	3.7	11.9	57.3	25.4	0.8	0.8	100.0
6) 자치구의회	빈도	49	233	609	110	3	10	1014
	%	4.8	23.0	60.1	10.8	0.3	1.0	100.0
7) 지역 신문사	빈도	57	204	603	138	2	10	1014
	%	5.6	20.1	59.5	13.6	0.2	1.0	100.0
8) 지역 TV 방송국	빈도	54	180	622	142	6	10	1014
	%	5.3	17.8	61.3	14.0	0.6	1.0	100.0
9) 대전시 소재 기업	빈도	34	131	692	135	7	15	1014
	%	3.4	12.9	68.2	13.3	0.7	1.5	100.0
10) 시민단체 (참여자치연대, 환경연합 등)	빈도	36	154	562	233	17	12	1014
	%	3.6	15.2	55.4	23.0	1.7	1.2	100.0
11) 국민운동단체 (새마을, 자유총연맹 등)	빈도	42	165	599	187	8	13	1014
	%	4.1	16.3	59.1	18.4	0.8	1.3	100.0
12) 풀뿌리운동단체 (생협, 마을만들기 등)	빈도	35	140	592	219	18	10	1014
	%	3.5	13.8	58.4	21.6	1.8	1.0	100.0
13) 주민자치위원회	빈도	42	124	614	211	13	10	1014
	%	4.1	12.2	60.6	20.8	1.3	1.0	100.0

분석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대부분의 대전 시민(동료시민)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약간 낮은 15.3%로 나타났다. ②대전광역시청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3.7%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약간 높은 22.2%로 나타났다.

③대전광역시 의회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 다소 높은 32.3%로 나타났다. ④ 자치구청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약간 높은 23.9%로 나타났다. ⑤동사무소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대전의 다른 사회기관에 비해 높은 비율인 26.2%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낮은 15.6%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비율인 57.3%로 나타났다. ⑥자치구의회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약간 높은 27.8%로 나타났다. ⑦지역신문사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3.8%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약간 높은 25.7%로 나타났다. ⑧지역 TV 방송국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4.6%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약간 높은 23.1%로 나타났다. ⑨대전시 소재 기업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4.0%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약간 높은 16.3%로 나타났다. ⑩시민단체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24.7%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낮은 18.8%로 나타났다. ⑪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19.2%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약간 높은 20.4%로 나타났다. ⑫풀뿌리 운동단체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23.4%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약간 낮은 17.3%로 나타났다. ⑬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22.1%로 나타났고,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약간 낮은 16.3%로 나타났다.

11) 대전시정에 대한 인식도

대전시정과 관련한 질문으로 시정은 투명한지, 공무원은 청렴한지, 시정이 일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지, 주민참여는 활발한지, 시민에게 와 닿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전시민 대부분이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에 높게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대전시정이 투명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그렇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높은 27.8%로 나타났다. ②대전시 공무원의 청렴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12.1%로 나타났고, 반면 그렇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보다는 높은 30.0%로 나타났다. ③대전시정이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17.2%로 나타났고, 반면 그렇지 않는다는 응답은 21.2%로 나타났다. ④대전시정은 주민참여를 장려하고 적극 지원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은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그렇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26.8%로 나타났다. ⑤대전시정은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은 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그렇지 않는다는 응답은 32.6%로 나타났다.

<표 3-31> 대전시정에 대한 인식도

대상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합계
1) 대전시정은 투명하게 수행된다.	빈도	56	226	625	89	4	14	1014
	%	5.5	22.3	61.6	8.8	0.4	1.4	100.0
2) 대전시 공무원은 청렴하다.	빈도	57	247	572	115	7	16	1014
	%	5.6	24.4	56.4	11.3	0.7	1.6	100.0
3) 대전시정은 공무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	빈도	33	182	609	161	13	16	1014
	%	3.3	17.9	60.1	15.9	1.3	1.6	100.0
4) 대전시정은 주민참여를 장려하고 적극 지원한다.	빈도	46	226	637	83	6	16	1014
	%	4.5	22.3	62.8	8.2	0.6	1.6	100.0
5) 대전시정은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펼친다.	빈도	77	253	601	62	6	15	1014
	%	7.6	25.0	59.3	6.1	0.6	1.5	100.0

3. 조사결과의 시사점

대전 지역의 사회적자본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하여 11개 문항에 걸쳐 대전에 거주하는 시민 1,0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일반시민 간의 상호 신뢰도는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간관계의 중심이 이해관계에 의해 형성되기보다는 선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사람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특정의 목적을 가진 다양한 집단의 구성을 통한 관계 맺기가 활성화된다면 전반적인 신뢰구축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웃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간에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는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서로간의 방문이나 경조사시 연락여부, 걱정거리를 얘기하거나 함께 야유회를 즐기는 등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다소 강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놓고 볼 때, 이웃 간의 관계를 형성시키는데 있어서 서로 부담이 되거나 사생활의 노출을 전제로 한 관계 맺기는 서로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소한 도움을 주고받는 이웃간의 전통적인 품앗이를 활성화 시키거나 바자회 등이 활성화된다면 이웃간의 신뢰 및 관계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동네의 공공문제인 불량청소년에 대한 대응, 치안문제, 공동의 동네문제, 동네일에 대한 관심도, 학교주변 환경 개선 등에 대한 역량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분석한 결과 “학교의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볼 때, 자기 자신의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네일을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무관심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동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마을신문이나 반상회 등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회 참여는 종교활동이나 취미활동을 위한 참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보호 등 사회운동에는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조사결과로 볼 때, 사회운동단체 등의 경우 전문 활동가 위주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나 역할 등의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전시민들은 국가(중앙)의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불신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국회나 정당, 그리고 행정부에 대해 불신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굳이 이번의 조사가 아니더라도 중앙의 정치권과 관료집단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의료계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공공기관도 민간영역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고객마인드가 제고된다면 그나마 불신의 폭은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의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 조사와 같이 대전 지역의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 조사결과도 중앙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풀뿌리운동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동사무소를 제외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사회적자본의 중요한 요소인 일반적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의 사회적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정부 자체의 신뢰회복 노력도 중요하고 일반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시민간의 신뢰를 높이는데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정부는 지역 구성원인 개인이 주도하는 지역사회의 성장을 돕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와 민간의 자발적 부문과 연계하여 공익에 기여할 수 있게 하고 지역사회 형성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촉진자 또는 촉매자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절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진단

1.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대전시는 “①경제성장을 위한 관주도형 행정으로 사회적 신뢰·시민네트워크 기능 쇠퇴, ②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공생·상생의 가치를 우선하여 마을단위부터 정상성 회복운동을 전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사회통합 구현이 필요한 시점, ③마을의 공동체의식과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 단계별로 맞춤 지원” 이라는 배경하에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은 주민간의 관계망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씨앗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시민공동체 형성과 사회적자본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그림 3-1>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틀

1. **모이자 주민지원사업 (1단계)** / 2013 : 마을이나 주민간 관계망 형성을 지향하는 소규모 모임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활동 및 소규모사업 등
2. **해보자 주민지원사업 (2단계)** / 2014 확대: 1단계 모임에서 결정한 마을사업의 시행,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3. **가꾸자 주민지원사업 (3단계)** / 2015 : 1~2단계를 통해 성장한 마을활동 및 마을사업의 지속가능 지원

2) 사업의 공모 내용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은 2013년 7월~12월 간의 사업기간으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7인 이상의 주민조직(아파트포함), 동단위·구단위의 마을모임, 대전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및 비영리활동(자생)단체(단, 법인 또는 동일·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 등에 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750백만원이고, 공모사업의 유형으로는 ① A형: 의제발굴 학습활동모임(2백만원이내, 170여개), ② B형: 학습활동과 소규모사업(2~5백만원이내, 50여개), ③ C형: 모여라 주민지원사업에서 결정한 마을사업의 시행·확대사업(20백만원이내, 5개사업 이내) 등이다.

<표 3-32>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액	소요내역 및 산출기초	비 고
계		750,000		
공모사업비		690,000	•약 3,450,000원(평균)×40개 사업×5개구	
위탁교육	사업교육	40,000	•사업참가자 100,000원 × 40명 ×2회 × 5개구	구별 8,000
점검	현장모니터링	20,000	•100,000원×2명×5일×4회×5개구	구별 4,000

사업의 유형을 예시해 보면, 모이자 주민지원사업이 “사회문제해결형” 등 16개와 해보자 주민지원사업이 “아파트 좋은 문화 조성 사업” 등 8개로 제시되고 있다.

<표 3-33>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예시

사업유형	예시내용
모이자 주민지원사업	- 사회문제해결형모임(층간소음,학교폭력,호화결혼식등) - 모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간담회, 탐방 등 - 아파트 좋은 문화 조성을 위한 모임활동 -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교실 운영 - 엄마들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연극 - 마을극단 준비 모임 활동 - 마을안전지도 만들기 - 우리동네 공원만들기를 구상하는 모임 - 마을공동체 의제 발굴 및 마을조사 - 마을대학 및 공동체 사례학습모임 운영 - 마을신문준비 및 운영, 마을방송 준비모임 - 우리 동네 자투리 도서관만들기 추진준비 - 교육, 소비자 관련 협동조합 설립준비(교육 등) - 청소년 문화학교 만들기 모임활동 - 아파트 공동육아 또는 공동밥상 추진모임 - 청년 마을리더 육성사업
해보자 주민지원사업	- 아파트 좋은 문화 조성 사업 - 공동육아 또는 공동밥상 운영 - 자투리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및 추진 - 사회문제 해결형 운동전개 - 마을방송등 마을미디어 운영 - 마을 벽화 및 담장꾸미기 사업 - 마을쉼터 조성사업 - 마을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3) 사업의 세부추진 계획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은 사업공고를 시작으로 사업평가를 위한 워크숍을 끝으로 당해 연도 사업이 종료된다.

<표 3-34>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절차

절차	세부내용
1 사업공고	- 공 고 일: 2013. 3. 7(목) - 공고방법: 시・구 홈페이지 - 내 용: 사업유형, 신청자격, 공모절차, 사업기간, 심사선정기준,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사업비정산, 서류 안내 등
2 사업설명회	- 일 시: 2013. 3. 20(수) 14:00 - 장 소: 시청 대강당 - 내 용: 사회적자본 · 마을만들기사업 이해, 공모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대 상: 자치구 및 동의 주민조직, 지역NPO, 공동체단체, 아파트 대표모임, 마을만들기에 관심 있는 시민
3 사업제안서 신청 및 접수	- 기 간: 2013. 3. 21(목) ~ 4. 10(수) 18:00 - 접 수 처: 사업대상지역 동 주민센터 - 접수방법: 서 면 - 접수서류: 제안서, 참여주민서명부, 모임(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단체등록증(해당시)
4 사업업제안서 심사	- 기 간: 2013. 4. 15(월)~ 4. 30(화) - 심사방법: 서류 평가(60%) + 자치구 의견(20%) + 현장조사(20%) - 평 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심사 - 심사항목: 사업 타당성, 공동체 지향성, 주민참여도 등
5 선정결과발표	- 발 표: 2013. 5. 15(수) - 방 법: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6 사업비 지원 및 협약체결	- 기 간: 2013. 5. 16(목) ~ 6. 14(금) - 장 소: 자치구 - 지원항목: 인건비, 홍보비, 활동비, 사업진행비 - 지원금액: 신청금액에 대한 사업규모 및 내용에 따라 심사위원에서 최종적으로 조정 결정
7 참가자 교육	- 기 간: 2013. 6월중 / 세부일정 별도통보 - 대 상: 공모사업에 선정된 모임 또는 단체 - 인 원: 기별(2일) 40명 / 구별 2회 - 방 법: 교육기관 위탁(자치구→대전평생교육진흥원) - 내 용: 마을공동체 조성방법 및 수범마을 현장답사

8 사업모니터링	- 기 간: 2013. 7 ~ 11월 - 대 상: 사업진행중인 모든사업 - 방 법: 모니터요원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 - 내 용: 사업 진행상황 체크 및 컨설팅
9 정산 및 사업평가	- 시 기: 2013. 11~12월 - 방 법: 현장 및 서류평가 - 평가내용: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실적, 주민참여도, 회계처리 적정성 등 - 사업비정산: 증빙서류 첨부, 회계검사 후 부당집행액 및 불용액 회수
10 사례 평가 워크숍	- 시 기: 2013. 12월 중순 - 대 상: 공모사업 참여 모든 모임 및 단체 - 장 소: 시청 대강당 또는 기타 - 내 용: 사업성과 및 경험 공유 / 우수사례발표 - 시 상: 최우수 1, 우수 2, 장려 3

4) 사업의 주요서식 및 공모 결과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식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서식을 열거해 보면, ①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제안서(주민모임용, 단체용), ② 참여주민 서명부, ③ 모임·단체 소개서, ④ 사업계획서, ⑤ 가업예산서, ⑥ 사업검토의견서, ⑦ 사업현장조사서, ⑧ 사업협약서, ⑨ 청렴이행 서약서, ⑩ 보조금 청구서, ⑪ 보조금 정산보고서, ⑫정산보고서, ⑬추진실적 종합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 2013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35>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내용

구 분	계	"모이자" 주민지원 사업		"해보자" 주민지원 사업
		A형	B형	C형
총 사 업 비	690백만원	590백만원		100백만원
사 업 비 지 원	A형 : 2백만원 이내 B형 : 5백만원 이내 C형 : 20백만원 이내	2백만원 이내/ 1건	5백만원 이내/ 1건	20백만원 이내/ 1건
사 업 량	220여개 내외	170여개 내외	50여개 내외	5개 이내
접 수 결 과	400건	212건	166건	22건
경 쟁 률	1.7 : 1	1.2 : 1	3.3 : 1	4.4 : 1

<표 3-36>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결과

(단위:천원)

구 별	계		A형		B형		C형	
	건 수	보조금	건 수	보조금	건 수	보조금	건 수	보조금
계	400	1,556,577	212	398,313	166	758,447	22	399,817
동 구	61	224,468	37	70,030	21	94,438	3	60,000
중 구	89	296,982	57	107,642	29	129,370	3	59,970
서 구	130	508,204	63	113,571	60	269,361	7	125,272
유성구	66	291,348	29	57,270	32	155,478	5	78,600
대덕구	54	235,575	26	49,800	24	109,800	4	75,975

2.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 조사

1) 조사의 개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공모 결과 대전광역시 5개 구에서 전체적으로 400건이 응모하였으며, 응모한 400건 중 최종적으로 216개(동구 39건, 중구 59건, 서구 59건, 유성구 34건, 대덕구 35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216개 단체(조직)의 대표를 대상으로 한 단체역량에 관한 사항과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우편, Fax,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216개 단체의 대표들에게 배포된 설문지 중 194개가 회수되었으며,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표들의 성별로는 전체 194명중 남성은 79명(40.7%), 여성은 115(59.3%)명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대표들의 연령별로는 20대가 6명(3.1%), 30대가 24명(12.4%), 40대가 50명(25.8%), 50대가 72명(37.1%), 60대 30명(15.4%), 70대 이상이 12명(6.2%)으로 나타나서, 50대의 대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탔다. 설문에 참여한 대표들의 학력은 중졸이하 14명(7.2%), 고졸이 57명(29.4%),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교졸이 88명(45.4%)명, 대학원졸 30명(15.5%)명으로 대표들의 학력은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결과 분석

대전광역시에서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이사업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는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산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216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94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유형별로 책정한 사업비가 적정한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1%가 보통이상이라고 하여 유형별 사업비는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37> 사업비의 적정성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명)	7	46	116	19	6	194
분포(%)	3.6	23.7	59.8	9.8	3.1	100.0

둘째,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216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94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대전시에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홍보활동이 이루어 졌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0.1%는 보통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홍보의 충분성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명)	5	38	93	51	7	194
분포(%)	2.6	19.6	47.9	26.3	3.6	100.0

셋째,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216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94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대전시에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설명회가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9.7%가 보통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9> 사업 설명회의 적절성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명)	12	78	84	19	1	194
분포(%)	6.2	40.2	43.3	9.8	0.5	100.0

넷째,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216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94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동 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이 용이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94.8%가 보통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0> 제안서 작성의 용이성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명)	19	112	53	9	1	194
분포(%)	9.8	57.7	27.3	4.6	0.5	100.0

다섯째,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216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94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동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적정한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7%가 보통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1> 구비서류의 적정성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명)	9	107	56	17	5	194
분포(%)	4.6	55.2	28.9	8.8	2.6	100.0

여섯째,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216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94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동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8.7%가 보통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2> 심사기준의 적절성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명)	14	118	56	6	0	194
분포(%)	7.2	60.8	28.9	3.1	0.0	100.0

일곱째,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216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94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이 적절한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1%가 보통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도 30.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3> 사업기간의 적정성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합계
빈도(명)	6	59	69	46	14	194
분포(%)	3.1	30.4	35.6	23.7	7.2	100.0

여덟째,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216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94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18.0%가 “사업재원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 수립의 어려움(15.7%)”, “공공지원체계의 부족(14.2%)” 등의 순으로 애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밖에도 구성원의 교육(봉사), 당시 시행일정과 다른 사업비 지원, 대상자를 찾아가는 일, 마을 구성원의 이해 부족, 예산집행 시기 지연, 지원금 활용에 대한 정보부족, 행정적인 문제, 활동가의 보수 등을 사업수행의 애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3-44> 사업수행의 애로점

구분	빈도(명)	분포(%)
사업발굴의 어려움	39	10.1
사업계획 수립의 어려움	61	15.7
사업의 전문성 부족	54	13.9
공공지원체계의 부족	55	14.2
마을리더의 부족	14	3.6
구성원간의 갈등	4	1.0
사업 정보 부족	41	10.6
사업재원의 부족	70	18.0
기타	50	12.9
합계	388	100.0

아홉째,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216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94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각각의 요소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중요도는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의 예산지원”에 대한 중요도는 92.8%, ② “주민대상의 교육”에 대한 중요도는 85.6%, ③ “활동가의 양성”에 대한 중요도는 82.5%, ④ “법·제도의 마련”에 대한 중요도는 65.5%, ⑤ “지침 및 매뉴얼의 보급”에 대한 중요도는 73.7%, ⑥ “전문가의 지원”에 대한 중요도는 80.4%, ⑦ “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대한 중요도는 86.6%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공공기관 즉, 지방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과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구성의 역량을 강화 하는 일, 그리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시행 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5> 사업수행의 성공요건

구 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치 않음	전혀 중요치 않음	무응답	합계
공공기관의 예산지원	빈도	102	78	9	2	0	3	194
	%	52.6	40.2	4.6	1.0	0.0	1.5	100.0
주민대상의 교육	빈도	65	101	20	3	0	5	194
	%	33.5	52.1	10.3	1.5	0.0	2.6	100.0
활동가의 양성	빈도	75	85	20	7	0	7	194
	%	38.7	43.8	10.3	3.6	0.0	3.6	100.0
법/제도의 마련	빈도	30	97	50	10	0	7	194
	%	15.5	50.0	25.8	5.2	0.0	3.6	100.0
지침 및 매뉴얼의 보급	빈도	46	97	37	5	1	8	194
	%	23.7	50.0	19.1	2.6	0.5	4.1	100.0
전문가의 지원	빈도	67	89	24	5	0	9	194
	%	34.5	45.9	12.4	2.6	0.0	4.6	100.0
구성원의 역량 강화	빈도	86	82	18	3	0	5	194
	%	44.3	42.3	9.3	1.5	0.0	2.6	100.0

3) 분석결과의 종합

지금까지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216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94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단체의 역량에 관한 질문과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업비의 책정, 사업에 대한 홍보, 사업 설명회, 제안서 작성의 용이성, 구비서류의 적절성, 심사기준의 적절성, 사업기간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는 보통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사업기간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다른 요소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업을 수행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애로점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요소는 “사업재원의 부족(18.0%)”, “사업계획 수립의 어려움(15.7%)”, “공공지원체계의 부족(14.2%)”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공공기관 즉, 지방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과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구성의 역량을 강화 하는 일, 그리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시행 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증진 방안

제1절 사회적자본 요소별 증진 방안
제2절 시민(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제3절 사회적자본 지표체계의 구축
제4절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제4장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증진 방안

제1절 사회적자본 요소별 증진 방안

1. 신뢰의 증진

신뢰의 확보는 사회적자본의 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신뢰는 다양한 수준과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신뢰를 중심으로 한 미시적 수준에서 국가와 사회의 신뢰를 강조하는 거시적 수준까지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신뢰부터 의사전달 매체의 신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신뢰가 존재한다. 신뢰의 수준과 영역의 다양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뢰의 증진을 위해서도 각 수준과 영역에서의 신뢰의 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 지역 주민들이 각각의 수준과 영역에 어떠한 신뢰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신뢰의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대전 지역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 및 증진이 필요하다. 앞의 제3장에서 논의한 인지도와 수준진단을 위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역의 전반적인 신뢰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공공기관의 신뢰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신뢰는 기관 자체에서의 문제를 넘어서 지역 전체의 신뢰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즉 지역주민들은 개인간의 신뢰, 사회단체 및 의사전달매체의 신뢰보다 대전 지역의 신뢰에 공공기관의 신뢰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공기관 신뢰 회복 및 증진의 방안을 찾아야 할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공공기관이나 제도의 영역이다. 응답자 과반수 이상의 지역 주민들은 공공기관 또는 제도의 신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기관으로 시청과 시의회를 선택했다. 일차적 대민 서비스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 구의회 및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더 큰 권력과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지방 경찰청, 지방법원, 그리고 지방교

육청에 비해 시청과 시의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청과 시의회가 지역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신뢰의 시작점을 일차적 대민서비스 기관이나 권력기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광역자치단체 및 의회에 두고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둘째는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영역이다. 지역주민들은 공공기관의 신뢰와 유사하게 공공기관 신뢰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의원으로 보았다. 경찰, 법원 및 교육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지방의원의 신뢰 회복 및 증진을 높힐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의 전반적 신뢰의 증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신뢰를 증진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신뢰 회복 및 증진을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 접근으로는 주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뿌리뽑아야 한다. 부정부패는 개인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문제인 경우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제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 취약점을 해결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감시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둘 필요가 있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부정부패가 미치는 포괄적 영향력에 대한 지속적 교육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반부패 문화를 생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강력한 제도로 인한 행태의 변화가 문화의 변화로 인한 행태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지속적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쉬운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 정보공개법에 의해 지역행정에 대한 정보공개는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공개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반 지역주민들에게는 정보공개의 절차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것은 정보공개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주민들의 신뢰를 획득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대전지역 정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의 절차를 보다 완화하여 일반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지역공동체를 위한 바람직하고 선한 공동체 규범 구축

개인들이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기회주의를 줄여서 사회적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자본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정된다. 개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규범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개인들의 단기적 이해관계라는 개별적 측면의 시각을 사회공동체에서의 장기적 이해관계라는 집단적 측면의 시각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사회적 규범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공동체 규범이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방해하고, 사회 전체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거나, 외부인을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주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Portes, 1998). 그러므로 지역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선한 공동체 규범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바람직하고 선한 공동체 규범을 구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공질서 확립, 시민의식 함양, 부정부패 근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대전시민들은 부정부패 근절이 전반적인 지역 공동체 규범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80%이상의 설문 응답자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가장 청렴해야 할 대상으로 정치인과 공무원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설문결과가 지역의 바람직하고 선한 공동체 규범의 완성적 대책은 아닐지라도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바람직하고 선한 공동체 규범 형성 및 구축의 출발점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보다 철저한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근절 방안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및 재정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사회 규범에서 공식적 규범의 확립은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준법의식의 향상을 위해 대전지역 주민들은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바람직하고 선한 공동체의 규범을 위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법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체제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과 함께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자본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어 왔다. 네트워크의 기능은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원자화된 개인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협력적 과정을 거쳐 집단적 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지역 네트워크의 형성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지역사회에서의 네트워크는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첫째, 네트워크 내에서 지역 주민들 상호간의 의무와 기대를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의무와 기대는 신뢰의 형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 둘째, 네트워크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통로로써 사용될 수 있다. 대중매체와 같은 공식적 채널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지역 네트워크는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셋째, 네트워크는 사회적 규범의 형성을 도울 수 있다. 법률의 제재와 같은 강제적 규범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발적 규범을 형성시킬 수 있다. 때로는 강제적 규범보다 자발적 규범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넷째,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준다. 이것은 지역 대표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되던 지역 주민의 의견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직접 지역사회를 위하여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지역 네트워크의 형성이 바람직한 사회적자본의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네트워크가 무엇인지를 살

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대전 지역 주민들을 대상을 통한 설문 응답에서 대전 지역의 주민들은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 중에서 봉사단체를 바람직한 사회적자본의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존에 봉사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주민들의 개별적 차원 또는 복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현상으로 보았다면 지역 전체를 위한 사회적 차원 또는 정책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봉사단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복지적 차원을 넘어 봉사단체가 사회적자본의 축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임이나 단체로써 바라보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지역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한 봉사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참여역량 강화

대전 지역의 사회적자본의 증진을 위한 중요한 참여방법으로 응답자의 상당수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공식적 참여와 비공식적 의견제시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청회,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시민 아이디어 제안 등을 통하여 지역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자본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참여의 활성화와 지역 사회적자본의 증진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현재도 많은 참여의 방법들이 제시되고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참여의 방법들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질 때 사회적자본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 참여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안이 존재한다. 첫째, 다양한 지역사회의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 기회의 확대는 네트워크 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다. 개인들은 다양한 단체들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현황들에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반영될 수 있는 기회와 권리가 있음에 대한 확신

을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참여 기회 확대와 함께 참여 과정에서 의견 소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 많은 공청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참여 기회의 확대에 있기 보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참여과정의 불신이 더욱 큰 문제다. 참여과정의 불신을 완화하기 위하여 참여 과정에서 주민들과 조직들의 의견 교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셋째, 제로섬(zero-sum)이 아닌 윈윈(win-win) 전략을 참여과정에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적이고 특정한 이익을 강조하기 보다는 장기적·전체적 비전을 통해 주민 전체에게 전해질 수 있는 혜택과 이익을 보여줘야 한다. 참여과정에서 특정한 세력의 이익만을 방어하고 대변하는 것은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획득할 수 없다. 참여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 상호 의사소통의 결과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지역 전체의 이익을 위한 방안을 고려하되 그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개별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참여과정의 확보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손해가 장기적으로는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비전이 필요한 것이다. 넷째, 참여의 과정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과정이 필요할지라도 주민 상호간 이해의 과정을 주민들이 참여 속에서 이해하고 성취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 상호간 신뢰가 형성되며 그들 스스로 지역 사회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해 나갈 수 있다. 이를 위해 상시적으로 참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관련 사안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학습 기회의 부여를 통해 주민들의 자질을 함양시켜 나가고, 대화법이나 의사소통법의 교육을 통해 참여의 방법과 상대방을 이해하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전체를 위한 대안의 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및 프로그램 활성화가 요구된다.

제2절 시민(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1. 시민(공무원)교육의 필요성

Campbell(2006) 그리고 Skocpol & Fiorina(1999) 등은 교육이 시민적·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다른 변수(계층, 수입, 직업, 종교 등)들보다 월등히 크다고 주장한다. 교육수준은 단지 개인들의 사회적 참여수준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동료 시민들과 타인에 대한 태도를 보다 긍정적으로 갖게 하여 타인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간접적인 사회화 과정이며 동시에 동료들과의 지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물과 사건을 주관적 관점에서 보다는 개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도와 준다. 이러한 개인들의 사회화 과정은 보편적 대인신뢰를 높여주고 나아가서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준다.

민주주의는 자기 자신들과 커뮤니티에 대해서 기꺼이 책임을 지고자 하고 책임을 감내할 수 있는, 그리고 정치과정에 대해서도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시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초중등 교육은 학생들의 민주생활을 준비시킴으로써 미래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삶과 커뮤니티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다. 초·중등 교육과정을 통해서 뿐만아니라 생애 전주기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실행된 사회적자본 연구들은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정치참여 및 시민사회활동에 더욱 적극적이며 대인신뢰, 제도신뢰, 관용, 정치적 지식, 사회적 규범 등의 변수들이 개인의 교육수준과 높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장수찬, 2013: 23-24).

이와 같이 시민교육은 초·중등 교육과정을 통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교육의 현실은 입시위주의 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따라서 학교교육 외에 시민성을 함양하는 교육의 역할은 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주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시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평생교육기관을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공직자들을 위한 시민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은 주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에 있어서 평생교육기관은 주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의 공무원 교육훈연기관은 주로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일반시민들의 사회적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전광역시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을 위한 사회적자본의 증진은 시의 교육훈련기관인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의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사회적자본에 관한 시민교육 강화

사회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평생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담당할 것인지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고민이 되어야 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보수·진보와 상관없이 지방정부-시민사회(중간결사체 및 비영리민간기구)-시민교육 전문기관-대학-초중등 교육기관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혹은 협약'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에는 평생교육 내용에서 시민교육 혹은 정치사회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적고 나름대로 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정치사회적 존재'에 대한 이해가 중심을 차지해야 하고 인문학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평생교육 혹은 시민교육이 취미생활, 취업훈련, 사회적 문제해결 등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사회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이 시민주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교육수요자들 스스로가 교육과정을 통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되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평생교육과정이 시민의식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주관하기 보다는 다양한 시민모임이 활성화되도록 잘

돕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리고 이들이 서로 네트워킹하도록 하여야 한다(장수찬, 2013: 38-39).

이러한 관점에서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대전시민대학에서는 "①대전시민대학 운영 강좌를 통해 시민과 정치인・공무원・학자・법조인・의료인・사회 활동가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소통하고 신뢰 할 수 있는 장 마련, ②각계 각층 전문가들의 교육기부 활동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대전시민대학 교육의 질 향상 및 사회 책무성 강화, ③사회 지도층의 기부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물질만능주의를 깨고 꿈을 나누는 기부는 행복을 나누고 확산 시킨다는 문화 정착" 등을 목적으로 사회적자본에 관한 일반시민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3. 사회적자본에 관한 공무원교육훈련 강화

일반시민을 위한 사회적자본 교육이 평생교육훈련기관을 통해서 실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라면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한 사회적자본의 형성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주로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교육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①조직원의 지식・기술・태도를 향상시켜 직무만족과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보다나은 직무의 효율성을 끌어냄을 목적으로 하고, ②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의 목표달성과 장・단기적인 성과향사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여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③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정신자세 확립과 맡은바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 양성 등이라고 할 수 있다(대전광역시, 2012: 16).

이러한 관점에서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는 "대전형사회적자본키우기과정"을 아래의 <표 4-1>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에 추가하여 대전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정책 중에 사회적자본을 키우기가 있는데, 데 타 시도에 비하여 우수한 사례를 소개하거나 또는 타시도에 비하여 사회적자본의 요소 중에 다소 열악한 부분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4-1>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교육훈련 과정

<table>
<tr><td>교육목표</td><td colspan="5">사회적자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시정 반영 및 정책추진능력 향상</td></tr>
<tr><td>교육대상</td><td>5급이하</td><td>교육기간</td><td>2일</td><td>교육인원</td><td>기별 30/4기</td></tr>
<tr><td>교과편성</td><td colspan="5"><table>
<tr><td>구분</td><td>계</td><td>소양분야</td><td>직무분야</td><td>기타</td></tr>
<tr><td>시간</td><td>14</td><td>3</td><td>10</td><td>1</td></tr>
<tr><td>비율</td><td>100%</td><td>22%</td><td>71%</td><td>7%</td></tr>
</table></td></tr>
<tr><td>교육내용</td><td colspan="5"><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rowspan="2">교과목</td><td colspan="3">교육시간</td><td rowspan="2">비고</td></tr>
<tr><td>계</td><td>강의</td><td>참여</td></tr>
<tr><td></td><td>총계</td><td>14</td><td>12</td><td>2</td><td></td></tr>
<tr><td rowspan="2">소양</td><td>소계</td><td>3</td><td>3</td><td></td><td></td></tr>
<tr><td>-자기계발, 건강관리 등</td><td>3</td><td>3</td><td></td><td></td></tr>
<tr><td rowspan="5">직무</td><td>소계</td><td>10</td><td>9</td><td>1</td><td></td></tr>
<tr><td>-사회적자본의 이해
-사회적자본과 지역사회공헌 활동
-사회적자본과 정부역할
-대전형 사회적자본 모델 구축</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기타</td><td>소계</td><td>1</td><td></td><td>1</td><td></td></tr>
<tr><td>-과정안내 및 설문조사</td><td>1</td><td></td><td>1</td><td></td></tr>
</table></td></tr>
</table>

제3절 사회적자본 지표체계의 구축

1. 지표체계 구축의 배경

사회적자본의 측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논의의 초기 단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 사회적자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아직 사회적자본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못하다. OECD는 사회적자본의 측정이 어려운 이유를 세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 있다. 첫째, 사회적자본의 측정에 있어 사회적자본의 근원, 기능, 결과 등이 혼동되어 있다. 둘째, 사회적자본과 관련된 요소들의 상당수는 암묵적이며 상호 연관되어 있어 측정이나

코드화가 어렵다. 셋째, 사람간의 상호작용이나 관계 등이 중요한 요소이나 이들에 대한 적절한 자료가 없어 측정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종합적인 사회적자본 측정을 위해 가능한 한 다양한 사회적자본의 범주가 측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자본과 관련된 행동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이 모두 고려되어 사회적자본 측정구조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민족, 사회마다 문화의 차이로 인해 사회적자본의 모습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회적자본 관련 연구들 중 사회적자본 정책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사회적자본의 실태조사나 측정에 관한 연구들은 선진국과 같이 국가통계청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보다 개인이나 기관 수준에서 탐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조권중, 2010: 72-73).

이와 같이 사회적자본의 수준을 측정하는데는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자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지역적 차원에서 사회적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한경의 특성과 정책적인 활용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전광역시 역시 대전의 지역적 특성과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자본 정책의 활용도를 감안하여 사회적자본에 대한 개념적 준거틀을 설정하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2. 지역사회와 사회적자본 지표의 연계성

사회적자본은 제도주의적 접근(Coleman, Putnam, Fukuyama 등), 규범적 접근(Innes, Healey 등)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개념을 규명하는 연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역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써의 사회적자본은 지역의 관습과 문화 및 역사적 요인들의 차이나 지역 간의 격차를 이해하고 나아가 이를 극복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Putnam(2000)은 지역적 이동이 잦은 사람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연대의식이 낮고,

지역모임이나 지역사회의 일에 관여하기를 싫어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인구이동률이 높은 지역사회는 사회적자본의 형성이 어려워 범죄발생률이 높고, 학교행사가 적으며, 비록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이 있어도 그들 이웃과의 유대가 약해 사회적자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Putnam(2000)은 미국의 경우 도시 인구규모와 주민활동 참여율, 교회에 나가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대도시일수록 주민들의 지역사회 행사 참여율과 교회예배 참가율이 감소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교외화는 직주분리와 계층간 분리현성을 확대하여 민족, 계층, 교육수준, 생애단계에 따라 '생활방식에 의한 고립지역'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 각각의 집단거주지가 이웃 지역사회에는 보이지 않지만 격리되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하였다. 교외화는 주민들의 자동차에 대한 투자도 증대시켰고, 시간소비에 대한 주민행태도 변화시켰다. 가족들끼리 차를 타고 지역사회를 벗어나는 일도 잦아지고, 나아가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시간이 더욱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보면서, 매일 통근에 10분을 더 소비하면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비율이 10%감소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자본은 이를 접근하는 입장과 또 지역사회 특성 및 사회변천 과정과 맞물려 연구대상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야 하고, 또 항목별 가중치 또한 달라져야 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07). 최근 한국교육개발원(20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 대전발전연구원(2012)에서 발표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물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사회적자본의 측정지표 및 증진방안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역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사회적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개발은 지역기반·주재산업(개방형 R&D)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근거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으며, 불신으로 인한 비효율·고비용의 문제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을 지역적 차이에 근거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무형자원관리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측정지표의 개발

대전광역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사회적자본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신설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전지역 사회적자본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평가할 자료의 부족으로 사회적자본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 지역적 특성과 함께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발된 사회적자본의 측정지표들을 고려하여 사회적자본 측정지표를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기존 연구자료는 국가적 차원에서 각 지역별 사례 중심으로 측정지표가 개발되어 사회적자본 구성 요소인 규범, 신뢰, 네트워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전광역시는 공공자료를 통해 사회적자본의 핵심가치 6개를 선정하였다. 다음은 시에서 발간한 시정자료(2013, 3)에 제시된 6개의 핵심가치와 설명이다. 첫째는 신뢰이다(신뢰는 도시를 더 따뜻하고 더 풍요롭게 하는 든든한 밑거름). 둘째는 배려이다(배려의 정이 오고 갈 때 대전시민은 모두 이웃사촌). 셋째는 참여이다(참여는 모든 생각을 함께 어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바탕색). 넷째는 소통이다(사람을 존중하는 소통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감). 다섯째는 협력이다(협력은 서로 힘을 합치면 도시 경쟁력과 행복지수가 높아짐). 여섯째는 나눔이다(나를 위해 흘렸던 땀을 이웃을 위해 흘리는 일이 나눔의 시작임). 이러한 핵심가치는 이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근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 사회적자본 측정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6개의 핵심가치를 무시하고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적 단위로써의 연구보다는 특정 지역사회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 외국 연구사례를 통해 지역적 단위에서 논의되는 사회적자본 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여겨진다. 이를 위해 World Bank(2004)와 Danville Region(2009)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자본 측정지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World Bank(2004)는 사회적자본의 6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 측정지표는 지역사회의 지역 가구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 가

를 바탕으로 사회적자본을 측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 항목들은 개인의 영역에서 쉽게 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설문지를 통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well-bing(삶의 질 개선)에 사회적자본이 어떠한 공헌을 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사회적자본의 역할을 구체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육, 의료와 같은 차원의 질을 개선시킬 있고, 개개인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의 사회적자본의 역할을 의미한다. 또한 어떤 사회적자본이 지역의 복지혜택을 높여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가를 살펴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적자본을 증진할 수 있는 핵심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Danvelle Region 연구는 지역주민들이 그들 지역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를 중심으로, 7가지 영역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경제, 의료, 교육, 안전에 대한 인식여부 및 지역선호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Danvelle 지역의 사회적자본의 현황 및 문제점을 인식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 단위의 연구설계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에 적용할 사회적자본 측정지표 개발을 위해서 하나의 특정지역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 World Bank(2004)의 지표와 Danville Region Survey(2009)의 지표를 비교 분석하여 대전광역시의 사회적자본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전광역시에 정한 6가지 핵심가치에 따른 사회적자본 측정지표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결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자본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규범' 등은 사회적자본의 요소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6개의 핵심가치 내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2007),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2)의 연구에서는 규범과 네트워크가 사회적자본의 측정지표에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네트워크의 경우 이웃과의 모임이나 지역모임의 참여정도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와도 비슷하다. 또한 '규범'의 경우에도 '시민의식', '호혜성' 등과 같은 사회적자본의 측정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연구나, 지역적 연구인 World Bank(2004), Danville Survey(2009)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제4절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1. 중간지원기관의 의의

1) 중간지원기관의 개념 및 발달 배경

중간지원조직은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능력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시행하는 기관이다(송두범, 2011: 32). 중간지원기관은 공공조직, 영리조직, 그리고 비영리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념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간지원기관의 명칭은 역할에 따라 "Intermediaries", "Third Parties", "Brokers", "Consoltant as Bridge Builder", "Bricoleurs"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중간지원기관은 "공공부문, 민간기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반시민 등과의 네트워크 활동과 사회적 기업의 참업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필요한 지원활동을 연계해 주는 조직으로 생산관리, 인사, 재무, 교육훈련, 회계, 법률, 홍보, 마케팅,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가 지원되는 조직이다"로 정의되고 있다(양용희, 2013: 71-71).

중간지원기관은 정부, 비영리조직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였다. 정부, 지자체 그리고 재단이 직접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인적·물적 자언과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중간지원기관은 이러한 역할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것이다. 전세계에서 중간지원조직이 가장 잘 발달한 미국에서 중간지원기관은 몇가지 원인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첫째는 사회복지를 비롯한 비영리부문 서비스에 대한 정부정책의 위임이다.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주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비영리부문의 정책과 서비스가 위임되면서 지역 중심의 중간

지원기관들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중앙에서의 지역으로의 위임은 사업의 유연성과 지역 욕구의 반영, 그리고 책임성을 촉발하였다. 두 번째는 기업을 중심으로 학교, 비영리조직 등 모든 조직에서 일어난 경제력의 분권화 현상이다. 기업의 19세의 수직적, 중앙집중식의 조직구조는 20세기에 있어서 비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복잡하고 글로벌 환경속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분권화, 죠인트벤쳐, 네트워킹 등의 유연한 전략들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공공분야에도 영향을 마쳤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의 파트너들 간의 의사소통과 연대에 따른 상호작용과 네트워크가 중요해지면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영국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 또는 지자체와의 연결을 위한 과정에서 중간지원기관들의 역할이 제기되었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자본,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양용희, 2013: 73).

2) 중간지원기관의 유형

일본의 중간지원기관을 공설공영(公設公營), 공설민영(公設民營), 민설민영(民設民營)의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공설공영은 행정기관의 시설로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고 100% 세금으로 운영된다. 공설민영은 시설은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위탁비나 조성비 등으로 민간단체나 NPO가 운영을 담당한다. 민설민영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중간지원기관의 활동형태를 기준으로 지역밀착형, 기능분야(전문분야) 특화형, 중간지원 조직지원형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송두범, 2011: 32, 재인용).

미국에서는 전국 NPO센터 네트워크(NCN)의 분류에 따르면, NPO센터의 주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센터, 서비스센터, 테마센터, 지역사회개발센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종합NPO센터(Multi-sector Center)는 NPO센터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많은 NPO들이 공동으로 입주해 사무실공간을 공유하며 비용절감과 공유서비스 등의 혜택을 같이 누리는 유형이다. 특히 입주한 NPO들은 서로다른 서비스 대상자(클라이언트)들을 갖고 있지만, 공유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센터시설을 이용해 직원들을 공유하는 등의 다목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 둘째, 서비스센터

(Service Center)는 지역사회의 비영리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공간에 위치해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서비스센터에 입주한 NPO들은 크라이언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다양한 서비스 활동을 한다.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직접 방문, 상담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특징이 있다. 셋째, 테마센터(Theme Center)는 특정 분야에 집중한 서비스 활동을 하는 NPO센터이다. 따라서 이곳에 입주한 NPO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유형의 활동을 하는 NPO들로 서로 공조활동의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40개의 테마센터들 중에서 37.5%가 예술테마센터로 높은 비중을 자치하며, 그 밖에도 사회정의, 지속가능성, 교육,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테마센터들이 있다. 넷째, 비영리 인큐베이터(Nonprofit Incubators)는 주로 새로운 신생 NPO들의 초기사업정착을 지원하는 유형의 NPO센터로, 매우 드물게 찾아볼 수 있다. 신생 NPO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입주 기간도 짧고, 상담 등의 전문 서비스 지원기간도 비교적 짧은 편이다(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15-16).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2011년 1월에 개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하여 운영 중에 있다. 지역별 지원기관의 유형은 민간단체, 연구소(7개소),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사회적기업지원센터, 연구소(5개소)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일부는 자치단체 출연기관, 일부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의 중간지원기관의 본래 역할보다는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역시 기존 사회적기업지원기관,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자체출연구원, 민간 컨설팅 회사 등 컨설팅 수행을 위한 조직들을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동체지원센터가 중간지원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송두범, 2011: 33).

3)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중간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각 나라마다 정치, 경제, 사회적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은 주로 재단과 지역사회 그리고 자본조달과 같은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특히 배분기능 중심의 재단들은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간지원기관들의 기술,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다(양용희, 2013: 74). 또한 미국의 중간지원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필요로하고 있는 각종 지원과 기술을 알선, 조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 조직운영, 재정, 인력확보, 홍보 등의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사회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른 조직과 네트워크하고 각종 제도와 법률의 적용을 수용하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의 정비, 조사, 연구, 여론형성, 제도화, 입법화를 위한 로비활동 등 전략적인 장기적 역할을 담당한다(송두범, 2011: 33).

영국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정책과 지원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매개하기 위한 전국 및 지역단위의 중간지원기관들이 발달되어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투자, 융자, 그랜트 등 재정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본조달을 위한 중간지원기관들이 발달되어 있다. 지역의 중간지원기관들은 주요 수혜대상자에 대한 지원, 표준화된 질적 서비스와 책임성, 자원의 연계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의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 한다(양용희, 2013: 74).

일본에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비지니스를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예비사업자를 위한 창업, 경영, 사업전개, 자금조달, 인재육성, 상담창구, 정보발신, 교류촉진, 코디네이트, 조사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커뮤니티비지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으로는 사업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 중간지원 활동외에 공공시설 위탁운영 등 별도의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 NPO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정보의 수・발신, 자원과 기술의 중개, 인배육성, 상담 및 컨설팅,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평가, 정책제안,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송두범, 2011: 34).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배분기능의 재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기업이나 자선단체,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융자, 투자조직이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이를 업무를 중개할 중간지원기관의 기능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 기업사회공헌과 사회적기업의 확대로 인해 이들 업무를 대산 수행할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양용희, 2013: 74).

2.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역할 제고

1) 설치배경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지난 3월에 시행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제13조(사회적자본지원센터) 및 제14조(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②민·관 협력 증진, ③사회적자본 확충사업의 지원, ④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공익활동의 자료수집 및 홍보, ⑤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및 공익 활동가의 발굴·육성, ⑥시민공동체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에 관한 사항, ⑦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및 협력, ⑧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센터는 사회적자본이 무형의 관계자본이라는 점에서 '상호 신뢰의 네트워크를 마을과 일터에서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을포털, 마울교육, 마을미디어, 마을일꾼, 커뮤니티 맵핑, 마을네트워크 활성화 등 6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협력적 소비를 통해 배려와 협력을 체험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 박람회, 불만 노래하면서 대안을 탐색하는 대안합창제 등의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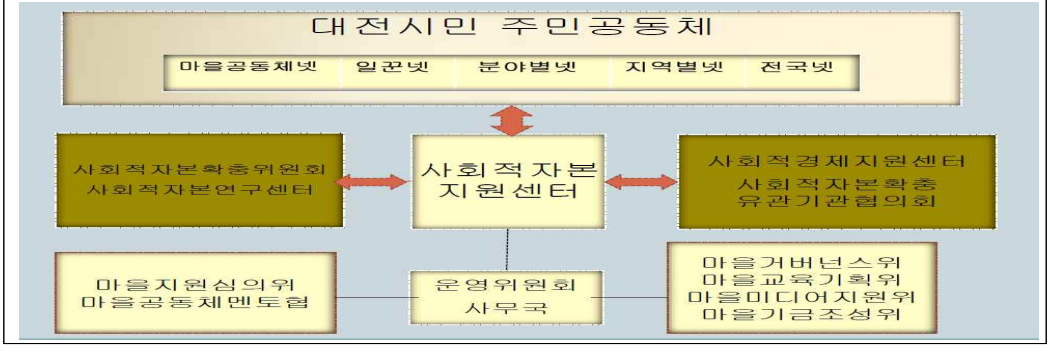
2)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추진체계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체계는 <그림 4-1>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의 추진체계 상의 특징은 ① 연구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사업협의・조정, ②사회적자본확충유관기관과의 정책적 협력회의 개최, ③기획단계부터 가계전문가의 참여 확대, ④운영위원회의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사업추진체계

○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인적구성 및 업무분장
- 센터장: 업무총괄, 대회협력, 각종 위원회 운영
- 기획운영팀: 센터운영 및 민관합력담당
- 사업지원팀: 마을공동체지원 담당

○ 외부기관과의 협력
- 사회적자본확충위원회, 사회적자본연구센터 정보교환 및 사업협력・조정
- 사회적자본확충유관지원기관협의회: 평생교육진흥원, 대전문화재단, 대전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 사회적기업통합지원센터 등
-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내부위원회: 수혜대상자가 사업계획단계부터 참여 및 각계 전문가의 참여 확장
- 운영위원회: 센터 운영계획안 자문 심의 평가,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 마을지원사업심의위원회: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에 대한 상시지원심사, 관련분야 전문가 및 공직자로 구성
- 마을멘토협의회: 분야별 마을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전문가, 자원연계 기관 단체의 지도자를 멘토로 위촉, 맞춤형 컨설팅 및 자원연계 지원
- 마을거버넌스지원위원회: 주민자치회 및 마을계획 등 마을거버넌스의 실천을 위한 자문 및 지원
- 마을교육기획위원회: 마을교육의 기획 자문 및 마을교육에 대한 자문지원
-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 마을미디어의 설립 운영에 대한 자문과 지원
- 마을기금조성지원위원회: 마을기금의 모금과 조성운영에 대한 자문과 지원



자료: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개소식 자료집(24-25)

3)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역할제고 방안

한국의 중간지원기관들은 정부, 지자체, 기업 등 지원조직과 지원 대상 집단사이의 순기능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아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국의 중간지원기관은 정체성의 부재, 낮은 사회적 인지도, 취약한 재정구조, 전문인력의 부족, 지원조직과의 수직적 관계, 중간지원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협력부족 등의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중간지원기관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재단이나 전문 비영리기관들이 발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을 대행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다. 이는 대부분의 중간지원기관들이 전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의존함으로써 자생력을 지니지 못하는 상황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지원기관들의 중간 조정기관으로써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양용희, 2013: 78, 재인용).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역시 한국의 중간지원조직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동 센터는 설립 초창기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간지원기관으로서 충실한 기능과 역할을 요구하기에는 다소 무리하다는 판단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센터는 내부적으로 운영체계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우선 선행되어야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에서 사회적자본의 증진을 위하여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을 필수적이다. 지방행정조직의 특성 상 사회적자본의 형성에 관한 전문인력과 활동가, 그리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를 보유하거나 확보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여기에 더하여 지방의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중간지원기관에 대한 선진사례가 일천한 것은 대전광역시의 입장에선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하에서도 대전광역시는 사회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조례시행)과 전담조직(자치행정과 사회적자본 담당)의 조성, 그리고 중간지원조직(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과 연구조직(대전발전연구원 사회적자본연구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 간의 협력적 파트너십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대전광역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하겠다.

특히, 동 센터는 대전광역시가 사회적자본의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마을사업 운영자에 대한 퍼실리테이터 및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제5장 결 론

제5장 결 론

앞에서 논의한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자본에 관한 문헌고찰을 통해 사회적자본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둘째, 대전광역시의 사회적자본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지도조사 및 사회적자본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조사결과 등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대전광역시가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대전지역의 사회적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해 ①일반적인 사회적자본의 구성요소별 증진 방안, ②대전광역시의 사회적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민(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방안, ③지역에 적합한 사회적자본 지표체계 구축 방안, ④사회적자본의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의 실태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자본에 대한 인지도 분석에서 ①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자본에 대한 인지도는 23.3%로 나타났고, 이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대부분은 방송을 통해서 대전시가 사회적자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대전 시민들은 대전시의 사회적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 '지역 네트워크' -> '시민들의 참여' -> '신뢰'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사회적자본의 구성요소 중 신뢰부문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증진시켜야 할 것은 '공공기관의 신뢰' 라고 지적하였다. ④사회규범의 향상을 위하여는 '부정부패근절' 과 '시민의식함양' 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지역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활동 중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봉사단체' 의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⑥대전지역의 사회적자본을 증진하기 위한 참여방법으로 공공기관 정책결정과정에서 '공식적·비공식적 참여' 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전지역의 사회적자본의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조사에서는 ①일반시민 간의 상호 신뢰도는 약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간에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정도는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서로간의 방문이나 경조사시 연락여부, 걱정거리를 얘기하거나 함께 야유회를 즐기는 등에는 부정적인 응답이 다소 강했다. ③우리 동네의 공공문제인 불량청소년에 대한 대응, 치안문제, 공동의 동네문제, 동네일에 대한 관심도, 학교주변환경 개선 등에 있어서 "학교의 주변환경을 개선" 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④대부분의 사람들의 사회 참여는 종교활동이나 취미활동을 위한 참여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보호 등 사회운동에는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⑤대전시민들은 국가(중앙)의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불신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국회나 정당, 그리고 행정부에 대해 불신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⑥대전지역의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도 조사결과도 중앙의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풀뿌리운동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대한 신뢰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에 선정된 216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94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조사에서 ①사업비의 책정, 사업에 대한 홍보, 사업 설명회, 제안서 작성의 용이성, 구비서류의 적절성, 심사기준의 적절성, 사업기간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는 보통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사업기간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다른 요소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다. ②사업을 수행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애로점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요소는 "사업재원의 부족" -> "사업계획 수립의 어려움" -> "공공지원체계의 부족" 등의 순으로 지적하고 있다. ③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공공기관 즉, 지방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과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구성의 역량을 강화 하는 일, 그리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시행 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론적 검토와 실태분석에 기초하여 대전광역시의 사회적자본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사회적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요소에 대한 증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신뢰의 증진을 위

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기관의 신뢰 회복 및 증진이 필요하고, 규범에 있어서는 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바람직한 지역 네트워크의 형성을 위해 봉사단체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고,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일반시민들이 공식적 참여와 비공식적 의견제시가 보장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의 사회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일반시민과 공직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시민을 위한 사회적자본의 교육훈련은 평생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자본의 교육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자본 지표의 개발 및 측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자본의 중간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은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 능력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제13조(사회적자본지원센터) 및 제14조(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내부적으로 조직의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한 운영체계의 확립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의 전담조직(자치행정과 사회적자본 담당)-중간지원조직(사회적자본지원센터)-연구조직(대전발전연구원 사회적자본연구센터)-평생교육기관(대전평생교육진흥원 등) 등의 기관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가 사회적자본의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마을사업 운영자에 대한 퍼실리테이터 및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고경훈・안영훈・김건위.(201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곽현근.(2012).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전략, 「대전지역 사회자본 확충 방향 세미나 자료집」, 대전발전연구원.

김명숙.(2004). 지역사회자본의 지방정치에 대한 효과,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6(3): 23-42.

김제선.(2013).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방향과 과제, 제5차 대전사회적자본포럼 자료집, 29-38.

김태룡.(2006). 시민단체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0(3): 27-51.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2013).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개소식 자료집.

대전광역시.(2012). 「대전광역시 공무원교육훈련 기본계획」.

대전광역시.(2012). 대전광역시 교육훈련 기본계획.

박통희.(2010). 대인신뢰에 대한 가치관과 단체참여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4(1): 67-97.

박희봉.(2009). 「사회자본」, 조명문화사.

박희봉·김명환. (2000).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증진에 관한 연구 :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34(4): 219-237.

박희봉・김명환.(2000). 지역사회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능력: 서울 서초구와 경기 포천군 주민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4(4): 175-196.

박희봉・이희창・조연상.(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7(3): 45-66.

삼성경제연구소.(2009).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서순탁.(2001). 사회자본 접근방법의 정책적 함의,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소진광.(2004). 사회적자본 형성을 통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연계화. 「지방행정연구」, 18(2): 68-91.

송경재.(2006). 한국의 지역 사회적자본과 시민참여, 「지방행정연구」, 20(3): 133-164.

송두범.(2011). 충남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열린충남」, 통권56호: 31-39.

신영진.(2007). 전자정부구현에 있어서 사회적자본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양용희.(2013). 한국의 지역재단과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NGO연구」, 제8권, 제1호: 65-82.

유석춘・정미혜・정병은・배영.(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도서출판 그린.

이곤수・송건섭.(2007). 지방정부의 시민접촉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1(1): 133-152.

이숙종・김희경・최준규.(2008).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1): 149-170.

이재열.(1998). 민주주의, 사회적자본, 사회적 신뢰, 「사상」 여름호: 65-93.

임승빈・이승종.(2005). 지방정부 역량과 자치구의 사회적자본과의 관계, 「지방행정연구」, 19(3): 3-26.

장수찬.(2013).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평생교육의 역할, 「대전평생교육포럼」, 통권 제5호: 19-40.

조권중.(2010). 「2010 서울시 중장기 사회적자본(Social Capital) 증대방안 연구」, 서울연구원.

최기조.(2010). 사회적자본과 지역발전의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최길수.(2013). 대전의 사회적자본의 수준 진단과 시사점, 「대전발전포럼」, 통권 44호: 135-151.

한국개발연구원.(2007). 한국경제·사회와 사회적자본.

한국개발연구원.(2007). 한국경제・사회와 사회적자본.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12).「시민활동 촉진을 위한 시민사회 지원방안 연구」.

Adler, P.S. & Kwon, W.(2000). Social Capital: The Good, The Bad, the Ugly. In Erick L. Lesser (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 and Application,* Butterworkh-Heinemann.

Bae, K.H.(2005). The Process of Enhancing Social Capital in the City of Los Angeles,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9(2): 121-138.

Bain, K., & Hicks, N.(1998). *Building Social Capital and Reaching Out to Excluded Groups: The Challenge of Partnerships,* In Paper presented at CELAM meeting on The Struggle Against Poverty Towards the Turn of the Millenium, Washington D.C.

Baker, W.E.(1990). Market Networks and Corporate Bahavior,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589-625.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241-258.

Burt, R.(1992). *Structural Hole: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Claibourn, M.P. & Martin, P.S.(2007). The Third Face of Social Capital: Membership in Voluntary Associations Improves Policy Accountability,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0(2): 192-201.

Coleman, J. S.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Coleman, J.(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s94-s121.

Daniere, A.(2002). Social Capital, Networks, and Community Environments in Bangkok, Thailand, *Growth and Change,* 33: 453-484.

Durlauf, S. N.(1999). The Case "Against" Social Capital, *Focus,* 20(3): 1-5.

Durlauf, S. N.(2002). Symposium on Social Capital: Introduction, *The Economic Journal,* 112: 417-418.

Fukuyama, F.(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Grootaert, C. & Van Bastelaer, T.(2002). Conclusion: Measuring Impact and Drawing Policy Implication, In Thierry Van Bastelaer (ed.)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Development*. Melbou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oka, B. R. & Prescott, J. E.(2002). Strategic Alliances as Social Capital: A Multidimensional View,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3(9): 795-816.

Lin, N.(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Luk, C.L., Yau, O.H.M., Sin, L.Y.M, Tse, A.C.B., Chow, R.P.M. & Lee, T.S.Y.(2008).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Organizational Innovativeness in Different Institutional Contex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9(4): 589-612.

Moran, P.(2005). Structural vs. Relational Embeddedness: Social Capital and Mangerial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6(12): 1129-1151.

Narayan, D. & Cassidy, M.F.(2001). A 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Social Capit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Capital Inventory, *Current Sociology,* 49: 59-102.

North, D.C.(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ECD.(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Ostrom, E.(2000). Social Capital: a Fad or a Fundamental Concept? In Partha Dasgupta & Ismail Seragel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Paxton, P.(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88-127.

Portes, A.(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 1-24.

Putnam, R. D.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64-683.

Putnam, R.D.(1993a).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American Prospects*, 4(13): 35-42.

Putnam, R.D.(1993b).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Sander, T.H.(2002). Social Capital and New Urbanism: Leading a Civic Horse to Water. *National Civic Review*, 91: 213-221.

Williamson, O.(1975). *Market and Hierarchies*. New York: Free Press.

Woolcock, M.(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151-208.

부 록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제정) 2013-02-28 조례 제 4171호

관리책임부서 : 자치행정과

제1조(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참여와 소통으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시민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위하여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자본”이란 대전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2. “시민공동체”란 사회구성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면서 공공선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대전광역시는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것

2.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정책결정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하도록 할 것

3. 지역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것

4.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은 시민공동체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5.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은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제4조(시민의 권리와 역할)① 시민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시민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시정에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시민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자본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방향 및 전략
2. 추진체계와 기반구축
3. 민·관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4.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자본 확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요 시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사회적자본확충 지원위원회의 설치)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3.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 시책 및 사업

4. 제12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연구센터의 설치·운영

5. 제13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과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사회적자본 확충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또는 활동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과 위촉위원 중 1명을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 위촉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자본 연구센터)① 시장은 사회적자본의 확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의 사회적자본 진단 및 사례 조사
2. 사회적자본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평가 · 분석
3.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중장기 전략방안 연구
4.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자본 지원센터)① 시장은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 시행
2. 민 · 관 협력 증진
3. 사회적자본 확충사업의 지원
4.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공익활동의 자료수집 및 홍보
5.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및 공익 활동가의 발굴 · 육성
6. 시민공동체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에 관한 사항
7. 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및 협력

8. 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지원)시장은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주민조직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2013.02.28 조례 제4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연구보고서 2013-20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의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발 행 인 이 창 기
발 행 일 2013년 11월
발 행 처 대전발전연구원
302-280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전화 / 530-3517, 팩스 / 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 쇄 : 제일문화사 TEL 042-672-5193 FAX 042-672-519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